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2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코로나19가 은행의 대손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 과정

김 성 숙

코로나19가 은행의 대손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COVID-19 on Accounting
for Bank's Loan Loss

2022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 과정

김 성 숙

코로나19가 은행의 대손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문 태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 과정

김 성 숙

김성숙의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이청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서성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문태



2021년 11월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의의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5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6
제1절 코로나19 위기와 금융업의 정책적 대응	6
제2절 자산건정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11
제3절 은행의 대손회계에 관한 선행연구	15
1. 대손설정을 이용한 이익관리	16
2. 대손설정에 대한 시장반응과 기업가치	23
3. 회계기준 변경과 대손설정에 관한 사례연구	26
4. 은행의 대손에 관한 기타 선행연구	33
제3장 연구방법론	38
제1절 가설의 설정	38
제2절 연구모형의 설계	40
제3절 표본의 선정	42
제4장 실증분석 결과	43
제1절 기술통계량	43
제2절 단변량분석	45
1. 상관분석	45

2. 평균차이분석	47
제3절 다중회귀분석	49
1. 가설1의 검증결과	49
2. 가설2의 검증결과	53
3. 연구의 시사점	55
제5장 연구의 결론 및 한계	56
< 참고문헌 >	58

표 목 차

<표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12
<표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 비율	14
<표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43
<표 4> 상관분석 결과	45
<표 5> 평균차이분석 결과	47
<표 6-1> COVID가 대손상각비 설정에 미치는 영향	50
<표 6-2> COVID와 이익의 상호작용이 대손상각비 설정에 미치는 영향	50
<표 7-1> COVID가 대손충당금 설정에 미치는 영향	53
<표 7-2> COVID와 이익의 상호작용이 대손충당금 설정에 미치는 영향	53

ABSTRACT

The Impact of COVID-19 on Accounting for Bank's Loan Loss

Seong Suk Kim

Advisor : Prof. Moon Tae Kim, Ph.D.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loan loss provision(LLP) and loan loss allowance(LLA) were set relatively more than other years in the year of the outbreak of coronavirus infection (Corona 19, COVID), which was extensively launched in 2020, targeting domestic banks.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2011 to 2020 with the big five commercial banks including KB Kookmin, Shinhan, Hana (KEB), Woori, and NH Nonghyup, Industrial Bank of Korea, Standard Chartered (SC First Bank), Korea City Bank (CITY), and six local banks. The datas was obtained through FnGuide database.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loan loss provision and the loan loss allowance were set more than other years of the study period, 2011~2020, in the bank in 2020 when government funding was released in large quantities due to the outbreak of Corona 19. This study took dummy variables in 2020 and analyzed them by causal explanatory relationship in response to the loan loss provision and the loan loss allowance.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were presented a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mean difference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orona 19 outbreak year variable

(COVID) and LLP, LLA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correlation at 1% level, which can be interpreted as more accounting for bad debt and bad debt provisions in the 2020 year when Corona broke out in the bank.

Secondly, as the result of mean difference analysis, the average of the LLP and the LLA was higher in the Corona 19 outbreak year variable (COVID) group and statistically showed a significant mean difference at 1% level.

Thirdly, as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cluding control variables, LLP and LLA in the year 2020 when Corona 19 broke out was more than other years, and it showed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e fact that banks could generate operating profits without active efforts at the time of Corona 19 is an unusual phenomenon stemming from the benefits of financial loans of corporations and households of the government, and banks can have incentives for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the burdens of political costs that can be raised in terms of the social pain sharing. The representative method of earnings management is to utilize the discretionary loan loss setting in the banks, and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fact that bank make use of increasing the loan loss provision and loan loss allowance to reduce reporting earnings in the year of Corona's outbreak.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2020년에 대대적으로 창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COVID19 또는 코로나19) 사태에 즈음하여, 국내은행이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를 다른 연도에 비하여 더 많이 설정하는지를 분석하여 이익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¹⁾.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질병에 대한 팬데믹 공포는 말할 것도 없고 이와 더불어 경제적 불황의 여파가 쉽사리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제조기업 대부분은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중단되는 사태에 봉착하고 있으며, 수요측면에서도 소비위축 및 고객의 주문취소 등이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매출감소, 성장성 둔화, 유동성 악화, 시장퇴출, 고용불안정 등 대대적인 경제불황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3월 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경제성장률이 0.5% 하락해 2.4%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신경희 2020). 이러한 상황은 자금사정이나 원자재 및 재고물량 비축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보다 더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는바, 중소기업에서의 경영기반이 흔들리게 되면 임금체불, 신규취업 및 고용유지의 불안정을 연쇄적으로 파급시킴으로써 결국 소비위축, 불황의 장기화 등 국가경제 대란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

이에 주요 선진국을 위시한 각국의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소비촉진 지원, 근로자 지원, 대출지원, 세금혜택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구제 및 지원에 대한 정부의 시책은 거시적이고 포괄적으로 국민에게

1) 본 연구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1039호에서 일컫는 자산손상(Impairment) 중 은행에서 설정한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 등을 주된 검증대상으로 하며, 이후 본문에서는 은행의 자산손상은 실무에서 사용하는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로 혼용한다 (단, 관련 규정과 선행연구의 인용문구는 제외한다).

공표되는데, 그 구체적인 실행이 금전적 지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특히 제1금융권인 은행의 업무와 불가분의 업무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업과 서민지원을 위한 자금은 거의 대부분 은행창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보도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연합뉴스 2020년 5월 17일자 기사).

18일부터 은행 지점에서 이른바 2차 '코로나 대출'과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수령 신청이 시작된다. (중략) 긴급재난지원금도 18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기업계 카드사를 제외하고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카드 등 은행 계열 카드사는 소속 금융그룹의 은행 영업점에서, BC카드는 제휴 금융기관 15곳에서 각각 신청을 받는다. (후략).

이와 같이 코로나19 사태 중에 은행은 국민경제 지원의 최일선 창구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은행 본연의 고유업무에서 발생한 수익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자금유통이 어려워진 가계와 중소기업들의 대출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은행의 이자수익이 대폭 증가한 것을 반증한다. 이와 관련된 보도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MBC 2021년 1월 25일자 저녁 8시 뉴스 보도기사).

41조 원. 지난해 국내 8개 금융 지주사들이 벌어들인 이자수익 추정치입니다. (중략) 이들의 지난해 전체 매출은 51조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로만 전체 이익의 80%를 넘게 번 겁니다. (중략) 역대 최저 금리에도 이자수익이 커진 건 코로나19 위기로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실직자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생계형 대출에 '영끌'과 '빚투'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 은행 대출 규모는 1년 전에 비해 180조 원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봉착하여, 여타 산업과 달리 은행업종에서의 수익증가는 위 보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은행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영업전략에서 기인한 것 보다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의한 대출의 증가와 정부의 보증에 의한 이자유예조치,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부실률이 줄어든 효과가 크다. 이러한 점은 시기적으로 이례적인 현상이며 은행에서의 여수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여타 기업은 고통분담과 형평성

차원에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다²⁾. 심지어 대부분 시중은행은 이와 같은 수익을 발판삼아 임직원에게 상향된 성과급과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해상황에서의 국민화합을 해치는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은행권은 최근 사회적 공감이 표출되어 제기된 이른바 '이익공유제'의 이익분담 대상으로 지목되자,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는 공공성을 강조하고 핵심성과평가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일시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순화책을 표방하고 나섰다.

은행의 이러한 완화된 대응은 이론적 관점에서 정치적 비용가설(Political Costs Hypothesis)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정치적 비용가설이란, 기업에서 수행한 활동이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노출되어 사회적인 관심 대상이 되거나 정치적 이슈가 될 경우, 규제당국에서 정책적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익을 환수하는 규제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기업이 지불해야 할 잠재적 비용이 늘어나게 될 리스크를 일컫는다. 정치적 비용은 독과점금지, 규제, 정부보조금, 세금, 요금 등 잠재적인 역 정치적 행동(adverse political actions)으로부터 기업에 부과된 모든 기대비용(잠재적 부의 이전, potential wealth transfer)을 포함한다(Watts and Zimmerman 1986; 고대영과 김문태 2007).

기업은 정치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이익을 줄이는 전략을 취할 개연성이 강하다. 가령, Watts and Zimmerman(1986)은 소비자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기간에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이익이 정부나 정치인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이들 소비재 생산업체는 다른 기업에 비해 보고이익을 감소시키는 회계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에 비해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다(Watts and Zimmerman 1986).

국내 연구로 윤순석과 고대영(2006)은 노사분규라는 정치적 상황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한 결과, 노사분규가 발생한 연도에 경영자가 이익을 줄이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고대영과 김문태(2007)는 독과점에 대한 시장감시와 정부규제가 큰 정유사가 정치적 비용 완화차원에서 이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제시한바 있다.

이를 코로나19 시점에서 은행에 적용하면, 정부의 금융지원에 의한 혜택을 은행이 큰 영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취하게 됨에 따라

2) 이처럼 은행업종의 수익증가는 정부지원 대출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다수 매체에서는 2020년에 불어닥친 개인투자자의 주식 열풍으로 은행의 개인대출이 크게 증가한 영향도 지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익공유제가 대두된 것을 회피하려는 유인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은행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적 비용에 의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급적 이익을 줄이는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회계보고 방법을 선택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은행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발생한 수익을 미래기간으로 이연하기 위한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³⁾. 본 연구는 은행의 이익조정을 연구한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코로나19가 경제적 이슈로 부각된 2020년을 주 검증연도로 선정하여 코로나19 발발 이전 연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와 유의하게 다른지를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둔다.

본 연구는 특정시점(2020년)의 특정한 사건(코로나19)에 대하여 특정업종(은행업)에서의 특정한 회계처리 방법(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비)이 이익조정의 한 방법과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현주(2004), 박연희(2005), 김민석(2012), 이미주(2016), 김영준 등(2016), 신일항(2017), 정남철(2017), 정남철과 김현아(2018)에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비를 활용한 은행의 이익관리 연구방법론을 준용하여, 코로나19라는 재해사태에서 은행이 정치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익조정을 구사하였는지를 검증한 시초의 연구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의 이익관리 유인, 방법과 수단, 통제장치 등을 확장한 공헌성과 차별성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정책당국에서는 은행업종에 부과할 수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한 실증적 논거를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본 연구에서 이익관리(earnings management)는 이익조정과 동일한 의미로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혼용한다. 이익관리 혹은 이익조정은 GAAP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므로, GAAP을 위반하는 이익조작(earnings manipulation)과는 다르다고 본다(김문태 2004).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검증대상은 KB국민·신한·하나(KEB)·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특수은행인 기업은행,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스탠다드차타드)와 한국시티은행, 그리고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 등 6개 지방은행에 한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연구대상 표본은 외환위기에 의한 구제금융이 진정되고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거시경제적인 연도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된 2011년부터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까지로 한정하였다.

주요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사업보고서와 FnGuide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입수하였으며, 개별 은행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를 포함한 재무변수가 모두 입수가능되어 활용가능한 경우에만 연구대상 표본으로 삼았다. 따라서 은행합병 이전이나 이후 은행자료는 동일한 은행으로 간주하여 통합 은행의 계정으로 인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도에 더미변수를 취하고, 이를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에 대응한 인과적 설명관계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기술통계량, 상관분석, 평균차이분석, 다중회귀분석(선형회귀분석)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하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금융업의 대응과 은행업 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주제에 관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은행의 이익관리 위주로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가설의 설정과 가설검증을 위한 실증분석 연구모형을 설계하였으며, 표본선정의 근거를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기술통계량, 상관분석, 평균차이분석, 다중회귀분석 등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고,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은 연구의 결론 및 한계로 구성되었다.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제1절 코로나19 위기와 금융업의 정책적 대응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CARES Act(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OVID-19 RELIEF for Small Businesses Act of 2020 등의 입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신경희(2020)에 의하면, 미국에서 중소기업은 미국 경제의 약 48%를 차지하며, 미국의 약 6천만명의 사람에게 고용을 제공하고 있는바, CARES Act 입법을 통해 전통적인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자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도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주로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Assistance) 대출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EIDL대출 지원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처럼 EIDL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이 많을 경우 기존 개인이나 가정을 위한 SBA 재난대출에서 기업대출 구성을 늘려야 하는 등 행정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신경희 2020).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하는 등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신경희 2020). 전년 4월 대비 실적 비교에서 대폭적인 마이너스 영향이 발생했다는 중소기업은 41.1%, 향후 마이너스 실적이 발생할 것이라는 답변까지 합하면 79.2%에 달했으며, 한편 플러스 효과가 발생·향후 전망된다는 기업은 5.4%에 불과한 실정으로 조사되었다(신경희 2020). 이에 일본의 중소기업은 현재 상황에서 사업 존속 자체를 최우선 시책으로 보고 있으며, 고용보조금지원을 통해 고용유지를 도모하고, IT를 활용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IT화·디지털화를 위한 투자지원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경영지원보다 시급한 자금수요에 대비하고 있다(신경희 2020).

유럽연합(EU)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부양을 위해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하

여,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회원국과 유럽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구제금융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유럽에는 25,000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이는 유럽 전체 기업의 99%, 유럽 전체 고용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유럽 중소기업의 84%가 매출감소를 예상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특히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신경희 2020). EU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은 ‘정부의 통제 밖의 비정상적인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로 인한 의료 지출 및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구제 조치와 같은 코로나19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지출을 수용하고 있다(신경희 2020). 특히, 독일의 쿠어츠아르바이트(Kurzarbeit) 제도는 대규모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에게는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고용불안정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재조명되고 있다(신경희 2020).

한편, 우리나라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가시화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취업자가 감소(전년 동월대비 19.5만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조업중단 등으로 인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일시휴직자가 급증(126만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신경희 2020). 정부는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위축되고, 세계 공급사슬의 파괴로 고용충격이 더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급격한 고용악화에 적극 대응하여 실업자 및 일시휴직자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기회 확대 등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 정책자금 보증과 대출업무 실행,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책을 모르고 있거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신경희 2020).

최순영(2020)은 코로나19가 발표된 글로벌 투자은행의 첫 실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 1/4분기에는 9개 글로벌 투자은행의 수익은 전년 동분기 대비 평균 4.2% 증가하였고, 수익이 감소한 투자은행의 경우에도 감소 폭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최순영 2020). 이는 코로나19가 2020년 3월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그 영향이 1/4 분기에 일부만 반영되었고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의해 트레이딩 등 투자은행의 일부 사업부문에서는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최순영 2020). 그러나 2020년 1/4분기 주요 투자은행의 순이익은 전년 동분기 대비 평균 48%로 큰 폭 감소했으며, 그 주요 원인은 대손충당금(Provision for losses)이

평균 5.5배 증가했기 때문이다(최순영 2020). 이는 주요 투자은행들이 1/4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의 수익변동성 영향력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최순영 2020).

한아름(2020)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증권업의 수익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2020년 1/4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성장세를 보이던 PI(Principal Investment, 자기자본 투자) 부문 수익이 순손실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해당 기간에 증권시장의 하락으로 파생상품평가손실이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한아름 2020). 또한, 감소 추세였던 위탁매매 부문의 순영업수익 및 비중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바, 코로나19 확산으로 증권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 국내에서 매수요인이 상승하면서 주식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주식관련 수탁수수료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한아름 2020).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개인투자자의 주식매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주식시장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충격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투자 위험도가 높은 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민기 2020). 또한, 같은 기간 변동성 및 왜도가 높은 주식에 대한 신용용자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관측함으로써, 저금리 시대에 자산형성을 위한 위험자산 투자가 대내외적 하방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을 지양하고 적절한 위험분산투자를 권장하였다(김민기 2020).

김준석(2020)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는 유례없는 수준의 순매수와 거래대금을 기록하고 주식의 가치상승을 견인하여 13조원의 고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준석 2020).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국면에서의 높은 변동성과 급격한 주가반등에 편승한 개인투자자가 투자능력에 대한 과신과 수익률에 대한 극단적 기대를 가지게 되어 나타난 과도한 거래현상으로 볼 수 있다(김준석 2020). 이러한 추가 수익은 시장수익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거래대금 급증으로 거래세, 매매수수료 등 거래비용은 13조 7천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준석 2020).

강현주(2020)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역할,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및 양적완화 도입 여부 그리고 시급한 재정수요와 장기적 재정건전성의 조화에 관해 고찰하였다(강현주 2020). 주된 요지는, 한국은행이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매입할 법적 제약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정부의 시장안정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유동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최종 대부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강현주 2020). 또한,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실물경제의 둔화정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준금리의 추가적 인하와 양적 완화를 강조하였다.(강현주 2020)

박창균(2020)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8.3조원에 달하는 긴급한 금융 자금이 지원되는바, 이는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부담해야할 과잉부채로써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박창균 2020).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코로나19로 긴급하게 공급되는 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집행기관이 자금 공급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인이 제공되어야 한다(박창균 2020). 만일 긴급자금 공급에 대한 손실이 발생될 경우, 집행기관의 고의나 중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국가재정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박창균 2020).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 제공된 자금이 추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적용되는 저금리를 유지하고 5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등이 됨을 주장하였다.(박창균 2020).

김필규(2020)는 전염병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여 회사채 발행수준의 감소, 신용 스프레드의 상승, 단기 자금시장의 유동성 경색과 금리의 상승 등 기업 자금조달시장의 불안정성이 일정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였다(김필규 2020). 투자자들의 신용위험 민감도가 높아져 신용채권의 차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영업실적이 저하된 상당수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신용채권시장의 경색도 예상된다. 또한 단기자금시장 경색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금리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의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김필규 2020). 이에 따라 자금조달시장의 위험요인을 살피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김필규 2020).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 및 자산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가계의 현금흐름상 채무여력과 지불능력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노산하 2020). 특히 취약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 임시일용근로자, 소득여력이 낮은 고연령층 등이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노산하 2020). 노산하(2020)의 연구결과, 자영업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가구의 경우 가상의 경제적 충격이 왔을 때 한계가구와 고위험가구 증가율이 60세이상 고연령층 가구(가구주 기준)와 소득2분위 이하 가구

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60세이상 고연령층 가구의 위험부채액 증가율이 다른 취약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노산하 2020). 특히 자영업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가구와 60세이상 고연령층 가구의 경우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가구당 부채액이 소득2분위 이하 가구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노산하 2020). 만일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소득여력이 낮고 고용안정이 취약한 고연령층 및 임시일용근로자 가구와 코로나 여파로 소득여력이 급감한 자영업종사자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금을 마련하여 일시적으로 이들의 소득여력을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노산하 2020).

제2절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은행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손충당금이란, 외상을 포함한 신용거래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도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여 채무제표에 이를 설정하고 표시함으로써 채무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은행업종에 한정된 연구를 진행하므로, 은행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 규정에서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비율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은행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1999년부터 기업여신제도의 일환으로, 대출기업에 대한 현재의 채무상태보다 미래의 기업가치를 판단하여 자산을 분류하는 소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 Forward Looking Criteria)을 적용하였다. 은행에서의 여신은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건전성 정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 기준으로 구분한다(이 기준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이라 칭한다). 우리나라 은행업 감독규정 제27조 자산건전성 분류 등에 의하면, 은행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이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절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등(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동 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단계와 내용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⁴⁾.

4) 신 BIS협약에 의거하여 감독당국은 2006년 12월 말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계산한 예상손실액(expected loss)과 자산건전성 기준에 의한 적립액 중 큰 금액을 적립하도록 지도하였다. 이러한 감독기관의 지도는 일선 은행에서 Basel II에 의한 신용리스크 관리체계와 채무회계 상의 대손비용 산출 체계가 통합되는 계기가 되었다(신일환 2017). 은행의 대손관련 비용은 채무상태표일 현재 금융자산에 존재하는 신용리스크(Credit risk)가 실현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신용손실(Credit losses)을 측정하기 때문에 은행이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에 근거하여 대손관련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컨대, Basel II에서는 신용리스크를 계량화하기 위해 ‘부도’시점을 정의하고 있는 바, Basel II의 부도는 차주의 신용이 악화되어 신용손실이 발생하는 연속적인 과정 중의 특정 시점에서 부도를 촉발하는 사건(Default triggering event)과 IFRS 손상사건(Loss event)은 상호 유사한 개념이며, 따라서 Basel II 부도 정의와 IFRS상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 식별도 동일선상에서 개념적으로 유사하게 대응될 수 있다(신일환 2017).

<표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구분	건정성 판단기준
정상	<채무상환능력 기준>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요주의	<채무상환능력 기준>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연체기간 기준 : 기업 및 일반가계 여신 기준, 이하 동일>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고정	<채무상환능력 기준>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분 <연체기간 기준> 3월 이상 연체대출금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부분 <부도여부 등> 최종부도 발생, 파산·청산 절차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부분
회수의문	<채무상환능력 기준>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연체기간 기준>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금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추정손실	<채무상환능력 기준>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 등을 감안,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연체기간 기준>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부도여부 등> 최종부도 발생, 파산·청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대손충당금을 많이 설정하게 되면 회계상 비용인 대손상각비에서 이를 충당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은행업은 여타 업종에 비하여 기업 및 개인대출이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대손충당금의 설정이 영업성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해당한다. 만일 순이익을 보고하려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고자 한다면 여수신에 대한 재무안정성에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5단계로 분류한 자산건전성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②). 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적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여신감리(Credit Review)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③항). 은행은 회수의문 또는 추심손실로 분류된 부실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④). 은행은 이러한 내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⑤), 감독원장은 은행의 보고 내용을 점검하고, 그 내용이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특정 자산건전성 분류 또는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⑥),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에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⑦). 은행은 대출채권 및 구상채권,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 유가증권, 리스자산, 가지급금 및 미수금, 미수이자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자산건전성 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 분류별 충당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①). 동 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대손적립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 비율

구 분	은행계정 및 종합금융계정	가계자금 대출	카드자산 (신용카드, 직불 또는 선불카드)	기타 카드자산
정상	100분의 0.85 이상*	100분의 1이상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1.1 이상
요주의	100분의 7 이상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40 이상
고정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65 이상	100분의 60 이상
회수의문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55 이상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75 이상
추정손실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100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100 이상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은 100분의 0.9 이상

**우선변제자산은 100분의 10 이상

***우선변제자산은 100분의 25 이상

****우선변제자산은 100분의 50 이상

제3절 은행의 대손회계에 관한 선행연구

이익관리(earnings management)란, 기업이 인정된 회계기준(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안에서 회계기법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의사결정을 말한다.⁵⁾ Schipper(1989)에 의하면, 이익관리란 “어떠한 사적인 이득을 얻을 의도를 가지고 외부에 재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 · · purposeful intervention in the external financial reporting process, with the intent of obtaining some private gain(as opposed to, say, merely facilitating the neutral operation of the process)으로 정의하였다⁶⁾.

은행의 이익관리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 설정 등 손상 회계와 관련이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로, McNicols and Wilson(1988)은 부실채권을 대상으로 기업의 총자산이익률(ROA)의 수준에 10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기초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기대치와 실제값의 차이(residual)를 구하고, 전체 대손충당금에서 비재량적 대손설정액을 차감한 재량적 대손충당금(개별발생항목, specific accruals)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이익수준이 높은 은행에서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을 상향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미국 은행 패널자료를 이용한 Ma(1988)의 연구에서도 재량적 대손충당금 설정액과 이익변수가 유의한 양(+)의 관련성으로 나타나 은행 경영자들이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이용하여 이익유연화를 실시한다고 보고 하였다. Collins et al.(1995)은 1971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의 은행 데이터를 이용하여 은행의 대손충당금과 당기 순이익 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Beatty et al.(1995)은 1987년과 1990년 총 638개의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이 자기 자본규제, 법인세, 이익 등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생액의 인식시기나 크기를 조정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기자본 변수는 대출채권 대손처리, 대손충당금 설정 및 신규증권 발행을 통한 외부자금조달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이 기준자기자본비율 충족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

5) 이런 점에서 이익관리는 GAAP를 위반한 이익조작(earnings manipulation)과는 다르다. 실무에서 일컫는 분식회계(cosmetic accounting, window dressing accounting)는 이익관리보다는 이익조작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6) 이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권수영 외(2015)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크기를 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El-Sood(2012)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878개의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위기 전후 미국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이익유연화를 모색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은행지주회사들은 자본비율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본비율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경기 호황기, 수익이 크게 발생한 시기 등에 맞추어 대손충당금을 조정하여 이익을 유연화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금융위기 이후 이익의 상향 유연화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구사된 결과를 보였다.

자본시장과 관련하여, Wanlen(1994)은 재량적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미래현금흐름 증가 및 주가와 양(+)의 설명관계가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투자자가 대손충당금 전입액 정보를 긍정적인 신호(good news)로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하였다. 이에 반하여, Docking et al(1997)은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투자자가 은행이 재량적으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대출자산의 건정성 악화로 미래에 기업이익과 기업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정보로 평가하여 부정적인 뉴스로 인식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Moyer(1990)는 은행업의 초과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규제수준 자기자본비율)이 대손충당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은행의 대손충당금이 자기자본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본적정성 지표가 양호하지 못한 은행일수록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을 유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은행은 국가의 거시적 경제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관련 당국의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바, 각국이 처한 경제적 현황과 여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한 이익관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확장하여 회계적 관점에서 이익관리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제로 자본시장 반응(가치관련성과 기업가치 포함), 사례연구, 회계기준 변경, 기타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1. 대손설정을 이용한 이익관리

최효순(2003)은 1995년부터 2000년말까지 각 연도 말에 상장된 107개 은행-연도별 표본을 대상으로 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 조정 유인과 조정수단의 선택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전입의 조정을 통하여 이익을 축소 또는 증대시킬 경우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을 고려하여 그 수준을 결정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을수록 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을 이용하여 이익을 축소 혹은 증대시킬 경우 서로 다른 수단을 선호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익을 축소시킬 의도가 있을 경우 추정대손을 증대 방법보다는 고정이하여신을 증대시키는 수단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반면에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할 때는 고정이하여신의 축소 방법보다 추정대손율의 축소 방법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효순 2003).

문현주(2004)는 은행의 경영자가 수익성 지표에 초점을 두어 재량적 항목을 반영하기 전인 조정전 이익이 높은(낮은) 경우 재량발생액을 많이(적게) 반영하여 이익의 변동을 감소시키는 이익관리를 행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은행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출금에 대한 기말 추가인식 대손상각비를 재량성이 높은 항목으로 활용한다고 전제하고, 국내 은행들이 기말에 추가적으로 인식한 대손상각비를 이용하여 이익관리 현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은행의 경영자들은 이익조정 이전 당해 연도의 성과를 보여주는 조정전 이익에 근거하여 이익관리를 구사한다는 점이 관측되었다. 즉 조정전 이익이 높은(낮은) 경우 이익유연화를 위해 재량성이 높은 기말 추가인식 대손상각비를 많이(적게) 보고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손설정율을 활용하여 이익조정하는 정도는 기업대출금이 가계대출금보다 더 강한 현상을 보였다(문현주 2004).

추가적으로 기말 추가인식 대손상각비의 증가가 미래의 잠재적 손실위험을 대비한 은행의 감당능력이 양호하다는 신호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확장하여 문현주(2005)는 충당금 설정액의 재량성과 은행가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경영자가 전기 대비 당해 연도 이익이 높다면 재량적 부분인 대손충당금의 기말 추가설정액을 높게 보고함으로써 재량적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조정유인이 자본관리보다는 이익의 변동을 감소시키는 이익유연화 차원에서 구사된다고 주장하였다(문현주 2005).

박연희(2005)는 상호저축은행이 재량성을 구사할 수 있는 대손상각비를 활용하여 이익조정을 행하는지와 BIS 자기자본비율관리를 행하는지 분석하였다(박연희

2005). 분석결과, 대손상각비와 수정보고이익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중위수 보다 낮은 이익보고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도 대손상각비를 낮게 계상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수정보고이익이 하락한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손상각비를 낮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연희 2005).

지현미와 박홍조(2006)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이 되는 상호저축은행 443개 기업-연도표본을 이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가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는지 검증하였다. 세부적으로 조정 전 자기자본비율이 전기에 감독 당국에 보고했던 수준보다 감소할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조정할 유인이 있다고 보고, 이 경우 그 조정 수단으로 대손충당금을 이용하는지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조정 전 자기자본비율이 기준 자기자본비율 5%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자기자본비율 조정행위가 나타나는지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조정 전 자기자본비율이 목표했던 수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클수록 대손충당금 설정율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상호저축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지현미와 박홍조 2006). 즉, 전기에 비해 자기자본비율이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하거나 또는 기준 자기자본비율인 5%에 미달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조정행위는 조정 전 자기자본비율이 목표수준에 미달되는 정도가 클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지현미와 박홍조 2006).

강태호 등(2009)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82개 지역농협의 410개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조정에 의하여 이익평준화와 순자본비율 관리를 행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강태호 등 2009). 연구방법으로는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재량적 대손충당금설정액 측정치를 개발하고, 순자본비율과 조정전 보고이익, 대출금 규모, 고정이하여신액 규모, 기업규모 등의 변수가 이 측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순자본비율이 낮은 기업은 대손충당금설정액을 감소시키고, 조정전 보고이익이 높(낮)은 기업은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증가(감소) 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역농협들이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재량적 조정을 통하여 순자본비율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익평준화도 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강태호 등 2009).

최서연과 박애영(2009)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행사 기간이 도래한 스톡옵션을

보유한 경영자가 속한 은행을 대상으로 재량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이용하여 은행 경영자 스톡옵션 보상과 이익조정 행태를 검증하였다(최서연과 박애영 2009).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의 행사가능한 스톡옵션 크기는 재량적 대손충당금 설정액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자가 행사가능한 스톡옵션 크기가 클수록 경영자는 기대되는 행사차익을 높이기 위해서 보고이익을 상향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변동형 스톡옵션을 도입한 경우보다 고정형 스톡옵션을 도입한 은행에서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의 크기가 재량적 대손충당금 설정액에 더욱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행사가능한 스톡옵션의 크기가 클수록 변동형 스톡옵션을 선택한 경우보다 고정형 스톡옵션을 선택한 경우가 경영자는 예상 행사차익을 높이고자 보고이익을 상향 조정하는 정도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소유집중된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소유분산된 은행에서 행사가능한 스톡옵션의 크기가 재량적 대손충당금 설정액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 소유분산되어 감시감독이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운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행사가능한 스톡옵션의 크기가 클수록 보고이익을 상향 조정하는 정도가 더욱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최서연과 박애영 2009).

배수현과 김종두(2012)는 2001년부터 11년 동안 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이익유연화 현상과 동기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비재량적 적립금과 재량적 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재량적 대손충당금을 측정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배수현과 김종두 2012). 비재량적 대손충당금을 결정하는 변수로는 은행의 규모 변수와 대출금 증가액을 전체 대출금으로 나눈 비율 및 부실 대출금의 증가액을 전체 대출금으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재량적 대손충당금의 결정요인으로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과 은행의 총자산이익률(대손충당금 적립액 전 이익/총자산)을 사용하였다. 재량적 대손충당금 적립에 미치는 자기자본비율의 회귀계수는 1% 수준에서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총자산이익률과 재량적 충당금적립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재량적 대손충당금 적립을 증가시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즉 은행의 이익이 높을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을 증대시키며 이를 통해 은행의 이익을 조절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은행에서도 기업과 같이 이익유연화 현상이 존재하며 그 수단으로 대손충당금 적립금이 사용됨을 나타

내고 있다(배수현과 김종두 2012).

권혁대와 이은서(2013)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7개의 시중은행과 6개의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은행의 이익조정 의 대표적인 대용변수인 대손충당금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은행의 규모, 비이자순이익, 부동산 담보 대출, 그리고 대손상각비가 대손충당금에 유의한 양(+)의 설명관계를 보였다. 이는 은행의 규모가 클수록, 비이자순이익이 늘어날수록, 담보별 대출 중 부동산이 많아질수록, 대손상각비가 많아질수록, 대손충당금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권혁대와 이은서 2013). 또한 가계자금 대출과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은 대손충당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나 가계자금 대출이 높아질수록, 이익률이 높아질수록 대손충당금은 낮아지는 성향이 있음을 시사한다(권혁대와 이은서 2013). 추가적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나누어 대손충당금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대손충당금을 결정요인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이은서(2013)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7개의 시중은행과 6개의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무수익여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이자순이익, 업무용 고정자산, 은행의 규모는 무수익여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설명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이자순이익과 업무용 고정자산이 많고 은행 규모가 클수록 무수익여신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총자산순이익률과 담보대출은 무수익여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 총자산순이익률과 담보대출이 높아질수록 무수익여신은 낮아지는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나누어 무수익여신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은 업무용 고정자산 비율이 높고 규모가 커질수록 무수익여신은 높아지는 성향이 있고, 지방은행은 비이자순이익이 높을수록 무수익여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무수익여신을 높이는 결정요인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효진 등(2014)은 중국의 상업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조정하는지 여부와 특히 조정 전 자기자본비율이 전기 자기자본비율보다 감소하였을 경우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상향조정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국 상업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전기에 비해 자기자본비율이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김효진 등 2014).

김영준 등(2016)은 2001년 1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상장여부에 따라 경영자의 이익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이 다를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비상장은행에서 이익유연화현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장은행이 비상장은행에 비해 이익상향 조정성향이 더 크고 이익하향 조정성향은 낮게 나타났다(김영준 등 2016). 이는 상장은행이 비상장은행에 비해 이익을 상향시키려는 유인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상장은행은 이익을 상향시키려는 유인이 높은 반면, 비상장은행은 이익유연화 유인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상장은행 중 정부가 경영자 임명권이 있는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의 대손상각비를 이용한 이익유연화와 이익조정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경영자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이익유연화를 더 하고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유인이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준 등 2016).

강현정 등(2017)은 상호저축은행이 소유 규제의 부재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주주의 소유집중도가 높은 점에 관심을 갖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지분율과 최대주주의 법인 여부와 2대주주의 지분율과 2대주주의 법인 여부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대주주의 지분율과 재량적대손충당금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재량적 대손충당금의 조정을 통해 이익을 하향조정 즉 유연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소유집중도가 높을수록 대손충당금을 통한 이익유연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강현정 등 2017). 둘째,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와 재량적 대손충당금도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개인주주에 비해 운영효율성이 높고, 정보 접근성이 높은 법인 주주들이 체계적인 이익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강현정 등 2017). 셋째, 상호저축은행의 2대주주 지분율과 최대주주의 이익조정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재량적 대손충당금이 감소한 결과나 저축은행의 법인 2대주주는 최대주주의 사적 효익을 위한 이익조정을 일정 부분 통제하는 모니터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강현정 등 2017).

정남철(2018)은 2009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의 445개 상호저축은행-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무수익여신 비중과 재량적 대손충당금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 법인 여부에 따른 소유구조 차이가 무수익여신 비중과 재량적 대손충당금 간의 관련성에 조절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무수익여신과 재량적 대손충당금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익상향과 동시에 재량적 대손충당금이 음(-)인 표본에서는 두 변수간의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또한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이러한 음(-)의 관련성을 완화하는 조절변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남철 2018).

정남철과 김현아(2018)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는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보상수준과 재량적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설명관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가 지배구조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정남철과 김현아 2018). 성과연봉제는 임직원의 업무동기를 제고하여 성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경영진이 높은 보수를 위해 이익을 조정할 가능성과 임직원이 단기목표에 집중한 나머지 장기성과를 희생시킬 가능성도 상존한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445개 저축은행-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저축은행의 보상수준과 재량적 대손충당금 간에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관찰되어 이익조정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정남철과 김현아 2018). 이러한 결과는 대형회계법인(Big4)으로부터 감사받지 않거나, 금융기관이 대주주가 아니거나, 대주주가 법인주주의 경우에만 나타나 취약한 지배구조하에서 성과보상제가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정남철과 김현아 2018).

박성종 등(2019)은 상호저축은행이 일반(상업)은행과 달리 고정여신에 대한 충당금의 일부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상호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일반대손충당금과 특별대손충당금으로 구분 분류조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익조정 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상호저축은행은 이익을 유연화하기 위하여 고정이하여신 항목을 분류조정함으로써 특별대손충당금 전입액을 조정하여 이익을 유연화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BIS 7% 미만 저축은행에서는 특별대손충당금 전입액을 이용한 이익조정 행태가 더 많이 구사되는 것으로 나타나 저축은행에서 고정여신 충당금을 자본으로 인정하는 현행 제도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박성종 등 2019).

2. 대손설정에 대한 시장반응과 기업가치

최효순(2003)은 1995년부터 2000년 말까지 각 연도 말에 상장된 107개 은행-연도별 표본을 대상으로 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 조정 유인과 조정수단의 선택에 대하여 주가반응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최효순 2003). 분석결과, 국내 주식시장은 은행의 비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이 증가할 경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보수적 기준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로 대손충당금전입을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은행의 경영진이 주식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전달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과다 적립한다는 Wahlen(1994)의 신호가설이 국내은행에도 적용되는 결과로 보인다(최효순 2003).

이러한 결과로 문현주(2005)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은행-연도 97개 표본을 대상으로 경영자의 재량적 활용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손충당금 기말추가설정액에 대한 가치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손충당금 기말추가설정액의 재량적 부분과 은행가치와는 긍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비재량적부분은 부정적인 관계를 보여 주었다(문현주 2005). 이는 재량적 부분의 유의한 긍정적인 관계는 당기순이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미래 수익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재량적부분의 경우는 대출채권의 손실이 실제로 반영되는 것으로 부정적인 관계를 보인 것이다(문현주 2005). 둘째, 재량적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조정유인이 자본관리보다는 이익유연화에 활용되는 결과로 나타나 전기 대비 당해 연도 이익이 높다면 은행 경영자는 재량적 부분인 대손충당금 기말추가설정액을 높게 보고하여 이익의 변동을 감소시키는 이익유연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문현주 2005).

김민혁(2018)은 대손충당금전입액을 이용하여 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재량적 조정유인을 비교분석하고, 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재량적 조정행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김민혁 2018). 특히 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액 증가에 의한 주식시장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경영자가 대손충당금전입액을 재량적으로 증가시켜 미래의 양호한 경영이익에 대한 사적정보를 시장에 전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은행과 저축은행이 전반적으로 대손충당금의 재량적 조정을 통해 이익을 실제에 비해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이익유연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은행과 저축은행의 특성별 분석결과에

서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지방·비상장 은행이 시중·상장은행에 비해 이익의 상
 향조정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주주가 개인인 저축은행, 중소형
 저축은행이 최대주주가 법인인 저축은행, 대형 저축은행에 비해 이익을 더욱 상향
 조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부실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직전에 재량적
 대손충당금의 환입을 통해 이익을 상향조정하고 적기시정조치 등 규율을 회피하려
 는 행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본비율관리 관점에서 은행과 저축은
 행은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손충당금전입액의 재량적 조정 보다는 대손충당금
 을 일종의 자본으로 인식하여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혁
 2018). 주식시장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에서 주식시장은 재량적 대손충당금 증가를
 해당 은행과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악화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민혁
 2018). 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액이 증가할 경우 기업가치(시가총액)의 감소로 이어
 져 양호한 미래 이익에 대한 경영자의 사적정보 전달 이론은 성립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민혁 2018). 다만,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전입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에 차이가 존재하고 은행의 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 증가에 대한
 기업가치 감소는 경영정보 공시일 당일 즉각 발생하고 이후 소멸하고 있으나, 저축
 은행의 경우에는 공시일 당일 기업가치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고 공시일 이후부터
 5거래일까지 지연 발생하고 있다(김민혁 2018). 소유가 잘 분산되어 있는 은행이
 거래의 대부분을 일반개인이 차지하는 저축은행에 비해 추가정보의 효율성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김민혁 2018). 마지막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영자에게서 전반적으로 취임 초기 대손충당금전입액을 재량적으로
 늘려 이익을 줄이는 Big Bath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민
 혁 2018).

김우열 등(2019)은 2018년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제1109호(금융상품)의
 도입으로 인해 대손충당금의 변동 여부와 이러한 변동여부가 기업의 보수주의 성
 향 및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와 관련성 여부와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추가적 대손충당금 설정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김우열 등 2019).
 과거 K-GAAP에서는 기대손실모형이 적용되어 대손충당금 회계처리가 수행되지만
 K-IFRS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손실모형으로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방식이 변경되었
 다(김우열 등 2019). 그러나 이러한 발생손실모형은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대손을 인식하기 때문에 손상차손의 인식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

만 손상의 인식을 지연시켜 대손충당금이 과소설정 되는 문제점도 예상된다(김우열 등 2019).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8년부터 K-IFRS 제1109호(금융상품)를 적용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도 예측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김우열 등 2019). 이처럼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대신용손실모형 특성상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대손충당금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김우열 등 2019).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대손충당금이 증감되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일부 기업들만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였으며,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한 집단은 그렇지 않는 기업에 비해 보수주의 성향은 높았으나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는 낮았다(김우열 등 2019). 둘째,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추가적으로 설정된 대손충당금은 기업가치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김우열 등 2019). 이를 통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이 기업가치를 하락시킴에도 불구하고 경영자는 손실을 적시에 인지하여 미래 손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는 미래 이익의 이해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김우열 등 2019). 마지막으로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과 경영자의 이익조정 정도에 따라 추가 손실충당금 설정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인지를 분석한 결과 보수주의 측정치에 따라 일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보수주의 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은 기업가치의 하락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켰다(김우열 등 2019). 하지만 경영자의 이익조정 수준에 따라서는 투자자들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에 대한 가치관련성을 차별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김우열 등 2019).

기현희(2020)는 대손충당금 기준이 2011년 K-IFRS 도입이후 발생손실모형을 적용하다가 2018년부터 기대손실모형으로의 변경된 점에 관심을 두고, 은행업에서의 대출채권이 총자산의 70%가 넘어 대손충당금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본과 당기순이익이 큰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하였다. 또한 발생손실모형으로 변경된 이후부터 당기순이익과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조정후순이익이 손익계산서에 동시에 보고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였다. 은행업을 대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기준변경으로 인한 당기순이익과 조정후순이익 공시의 추가설명력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손준비금 반영 전·후의 자본 및 당기순이익은 추가 설명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정보이용자들이 대손준비금 반영전 당기순이익과 반영후 조정후

순이익 정보의 차이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지었다(기현희 2020).

또한 기대손실모형 기간에는 대출채권 대비 대손준비금이 발생손실모형기간보다 감소되어 두 기간 간 자본과 당기순이익, 조정후자본과 조정후순이익의 주가설명력 차이가 예상되어 발생손실모형 적용기간과 기대손실모형 적용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 발생손실모형 기간에는 설명력이 전체기간보다 감소하였고 기대손실모형 기간에는 전체기간보다 설명력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기현희 2020). 이는 발생손실모형 기간의 자본과 당기순이익보다 기대손실모형 기간의 자본과 당기순이익이 주가를 더 잘 설명하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발생손실모형 기간에는 조정후순이익의 주가 설명력이 더 크게 나타났으나 기대손실모형 적용기간에는 대손준비금 반영전 후의 주가설명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손준비금 정보가 기대손실모형보다는 발생손실모형에서 더 유용한 정보임을 알 수 있다(기현희 2020).

3. 회계기준 변경과 대손설정에 관한 사례연구

윤재원과 최현돌(2005)은 중간목표비율에 의한 은행의 대손충당금 설정사례를 대상으로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비 정보의 주가관련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제표 본문에 인식되지 않은 대손충당금 부족설정액과 대손상각비 부족(과다)액에 대한 주석 등의 공시정보는 주가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재원과 최현돌 2005). 이러한 결과는 대손충당금 부족설정액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일부 은행에서 주석공시의 내용이 불충분하였던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윤재원과 최현돌 2005). 그러나 은행가치평가에 있어 대손충당금 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이에 관한 공시정보를 주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정보제공의 형태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윤재원과 최현돌 2005). 따라서 회계기준제정기구는 기준제정과정에서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에 대하여 주석공시의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이용자측면의 정보유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윤재원과 최현돌 2005). 둘째, 재무제표 본문에 인식된 대손충당금 정보와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순자산정보는 주가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재원과 최현돌 2005).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대손충당금에 대한 편법적인 회계처리가 순자산정보의 신뢰성을 크게 손상시켜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윤재원과 최현돌 2005).

2011년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으로 국내의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될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김지홍 등 2011).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영향분석 논문과 사례분석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은행과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 연구는 없었다(김지홍 등 2011). 이에 김지홍 등(2011)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은행 등의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고찰하고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규명하였다. 김지홍 등(2011)의 사례분석 결과 은행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이익잉여금이 34.61% 증가하고,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이 31.6% 증가하였다. 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환입 효과(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변경), 신종자본증권 계정재분류로 인한 잉여금 효과 등이 크게 나타났으며,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이익잉여금 증가의 대부분은 비상위험준비금이 자본으로 분류됨으로 인한 효과(29.06%)로 판단되었다(김지홍 등 2011).

박성중 등(2011)은 사례연구를 통하여 K-IFRS과 K-GAAP의 차이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기준 변경효과를 규명하였다. K-GAAP에 의하면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규정한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채권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정상, 주의, 고정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한 최저 적립액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박성중 등 2011). 한편 상장된 상호저축은행에 2011년부터 적용될 K-IFRS에서 금융자산의 손상은 앞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아니라 이미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발생주의모형을 적용하고 있다(박성중 등 2011).

개별적으로 중요한 금융자산은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충당금 산정절차를 따르며, 그 외의 금융자산의 경우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여 집합충당금을 산정한다(박성중 등 2011). 박성중 등(2011)은 사례분석 시 K-IFRS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에서 개별평가에 의한 대손

충당금의 산출은 신용대출의 경우 영업현금흐름법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산출하였으며,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치처분법으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산출하였다(박성중 등 2011). 그리고 집합평가에 의한 대손충당금 산출은 바젤기준에 의한 기대손실모형에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유사 신용위험 집합별로 산정하였다(박성중 등 2011).

B상호저축은행이 K-IFRS를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정한 결과 K-GAAP을 적용한 경우보다 전체적으로 60% 이상 대손충당금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중 등 2011). 이와 같은 결과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영세 서민층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PF 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시중 은행보다는 그 위험성이 큰 것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반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박성중 등 2011).

김수성과 고윤성(2011)은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경우 대손충당금의 적립방법이 크게 변경되고 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현행 기준에 의해서 설정하는 충당금보다 과소설정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현재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손충당금은 은행감독규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일정비율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경우 매 기간말 대출채권의 손실 발생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손실발생 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다(김수성과 고윤성 2011). 이에 따라 K-IFRS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을 발생손실개념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2013년부터 예상손실 개념으로 재적용토록 하고 있어 은행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준비금인 대손준비금 규정을 마련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을 신고조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김수성과 고윤성 2011).

고승의(2012)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한 은행의 대손충당금 산출방법과 이와 관련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규정, 개별 자산의 건전성등급 분류,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을 분석하였다(고승의 2012). 또한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계속 유지하고 있는 종전의 예상손실모형의 개념에 기초한 대손준비금의 산출과정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K-IFRS의 발생손실모형이 손실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임의적인 손상차손 인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워 손상차손을 과소평가하고 당기순익을 과대

평가해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분석하였다(고승의 2012).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기존의 발생손실모형을 대체할 방법으로 검토 중인 예상손실모형의 측정 원칙과 특성을 살펴보았다(고승의 2012). 2011년 K-IFRS 시행 이전에 금융기관은 예상손실개념에 근거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급별로 금융감독원이 규정하는 최소적립률을 상회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다. 그러나 2011년 회계연도에 K-IFRS 기준인 발생손실모형을 사용해 측정한 대손충당금은 종전의 금융감독당국의 최소적립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규모보다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승의 2012). 이러한 경우에 금융감독당국은 그 차액을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이익잉여금 중 임의적립금의 성격인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고승의 2012). 대손준비금의 적립은 배당금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의 사외유출을 억제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 8%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승의 2012).

김효진과 이기훈(2015)은 K-IFRS 도입으로 은행의 대손충당금설정율과 BIS 자기자본비율 및 대손준비금 조정후 보고이익의 변경효과와 이를 규제하고 있는 감독당국의 대손준비금(Non-GAAP 측정치)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2011년부터 적용된 K-IFRS에서는 금융자산 손상(impairment)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앞으로 기대되는 손실이 아니라 이미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발생손실모형을 적용하고 있다(김효진과 이기훈 2015).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설정하는 충당금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K-IFRS 도입 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대손충당금 관련 재무자료를 IFRS 도입 전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김효진과 이기훈 2015). K-IFRS의 발생손실모형은 손실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임의적인 손상차손 인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김효진과 이기훈 2015). 하지만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워 손상차손을 과소평가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평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왔는데, 금융감독당국이 공시하도록 규제하는 대손준비금 조정후 이익과의 비교를 통해 발생손실모형 전환 후 회계상 보고이익의 증가액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김효진과 이기훈 2015). 실증분석결과, 발생손실모형의 적용에 따라 2011년 이후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설정

율은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효진과 이기훈 2015). 발생손실 모형으로의 전환에 의해 기대손실모형에 비해 손상차손을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손준비금 적립 등에 의하여 BIS 자기자본비율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결과 또한 확인하였다(김효진과 이기훈 2015). 한편 IFRS 도입 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대손준비금 조정후 순이익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대손준비금이 금융규제상 보고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김효진과 이기훈 2015). 대손준비금전입액은 기대손실모형에서 발생손실모형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회계상 보고이익의 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11년 K-IFRS 도입 후 대손준비금전입액이 반영된 대손준비금 조정후 순이익이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대손충당금 설정모형 변화로 우려되었던 모형변화에 따른 보고이익 증가가 실증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효진과 이기훈 2015).

이미주 등(2016)은 미래채무상환능력기준(FLC)과 K-IFRS의 두 차례 회계기준 변경 등이 은행의 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FLC 적용 이후 부실채권과 대손충당금의 상관관계가 증가하였으나 K-IFRS 도입 이후에는 상관관계가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이미주 등 2016). 또한 K-IFRS 도입은 대손충당금을 통한 미래 상각규모의 예측가능성을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FRS의 발생손실모형은 대손충당금의 정확성은 높이지만 거시 경제 상황을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대손충당금에 반영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으로 회계정보의 적시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김효진과 이기훈(2016)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대손충당금 산출방법 변경 후 금융기관의 대손준비금 조정후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상대적 가치관련성을 검증하였다. K-IFRS 도입 후 금융감독당국은 발생손실모형으로의 전환에 의해 우려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으며, 대손준비금 잔액은 규제자본 산출시 차감하는 한편, 당해 연도 적립액을 비용처리한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대손준비금 조정후순이익을 보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김효진과 이기훈 2016).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연결손익계산서에 연결당기순이익과 함께 조정후순이익을 직접 공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김효진과 이기훈 2016). 이에 김효진과 이기훈(2016)은 K-IFRS 도입 후 대손

충당금의 과소설정액을 보완하기 위해 규제되는 조정후순이익 정보의 증가 및 수익률에 대한 가치관련성을 실증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K-IFRS를 도입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당기순이익 및 조정후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을 비교한 결과, 당기순이익을 설명변수로 하는 모형보다 조정후순이익을 설명변수로 하는 모형의 설명력이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진과 이기훈 2016). 이는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규제상의 조정후순이익이 회계기준상의 당기순이익보다 높은 수준에서 시장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효진과 이기훈 2016). 조정후순이익의 보고형태에 따라 차별화된 가치관련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 조정후순이익을 손익계산서에 직접 보고한 금융기관의 경우에 이익정보와 증가와의 관련성이 주식에 보고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진과 이기훈 2016). 또한 손익계산서에 직접 보고한 그룹만을 대상으로 당기순이익과 조정후순이익의 증가에 대한 상대적 가치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Vuong 검정을 실시한 결과, 조정후순이익을 사용한 모형의 설명력이 당기순이익을 사용한 모형의 설명력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진과 이기훈 2016). 즉, 당기순이익과 조정후순이익을 손익계산서에 함께 보고한 금융기관의 경우 당기순이익보다 조정후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효진과 이기훈 2016).

신일항(2017)은 사례연구를 통하여 영업점 수익성 분석시 고려해야 할 성과평가용 대손비용을 산출해야함을 강조하고, 은행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해당 은행의 자본보유 규모가 부담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고수익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이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되 대손비용을 최소화해야 함을 의미한다(신일항 2017). 관리회계 관점의 대손비용은 재무회계 관점의 대손비용과 그 산출방식이 상이한데, 이는 관리회계 관점의 대손비용은 은행의 경영 의사결정에 적합하도록 그 산출방식이 은행별로 고유하게 정의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고객사업부제의 운영에 따라, 고객 유형별로 분류된 영업점 평가군 별로 영업점 경영실적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있는데 대손비용을 반영한 영업점별 수익성 지표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의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들이 은행 전체 차원의 경영전략을 지원하는 경영관리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은행의 중요한 경영관리의 한 축으로 볼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목적을 위해 은행의 관리회계 시스템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신일항 2017).

정효섭과 김경무(2018)는 IFRS 9으로 인한 예비영향평가 결과, 일반은행 12개사는 2017년말 기준으로 손실충당금이 총 1조 1,763억원(별도재무제표 기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2017년말 일반은행 합산 대손충당금(별도기준)의 16.3%에 해당하는 규모로 손실충당금 증가분은 대출채권과 채무증권 등의 손실충당금 증가 효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정효섭과 김경무 2018). 분석의 편의상 손실충당금 증가분을 전액 대출채권의 충당금 증가로 가정할 경우, 일반은행의 Coverage ratio는 평균 14.9%p 상승하고, 보통주자본비율과 총자본비율은 평균 0.15%p씩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정효섭과 김경무 2018). 분석결과,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IFRS 9 도입에 따른 손실충당금 증가가 은행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정효섭과 김경무 2018).

이건재(2019)는 IFRS 도입 이후 국내은행의 신용손실 인식이 자본규제와는 별개로 후속기간의 여신취급 규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신용손실 인식이라는 재무보고 과정이 은행의 신용공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금융시장의 자금공급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이건재 2019). IFRS 도입 이후 국내은행에서 대손충당금 적립규모의 증가는 자본규제와 무관하게 다음 분기의 대출채권 증가 규모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감독목적상 충당금을 기준으로 적립하는 대손준비금의 증가는 다음 분기 대출채권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FRS 도입 이전 국내은행들은 감독규정에 따라 산출된 충당금을 그대로 회계상 충당금으로 인식했었는데 동 기간에는 회계상 충당금이 다음 분기 은행 신용공급 규모와 무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포트폴리오에서 기대되는 손실이 증가하는 경우 은행은 수익성 관리를 위하여 신용포트폴리오를 축소·조정할 유인을 가진다.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의 증감이 다음 분기 신용공급을 감소시킨 것은 IFRS 대손충당금이 은행의 신용손실에 관한 경제적 정보를 반영하고 있어 은행의 경영자가 대손충당금의 변화를 고려하여 미래 신용공급 규모를 조절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건재 201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이하 IAS39)의 복잡성과 불명확성, 그리고 발생손실 대손충당금의 과소 및 지연 인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금융상품, 이하 IFRS9)가 제정되어 201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신유정과 이영한 2020).

신유정과 이영한(2020)은 IFRS9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총자산 대부분이 금융자산인 국내 주요 은행의 전환사례를 분석함으로써 IFRS9 적용기업이나 적용 예정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IFRS9의 적용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은행 관련 규제환경에 IFRS9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은행들이 IFRS9으로 인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신유정과 이영한 2020). 분석결과, 은행 보유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고, 기대신용손실에 의한 대손충당금 평가로 인해 대손충당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였다(신유정과 이영한 2020).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들이 보유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규제자본의 경우 큰 변화는 없었다(신유정과 이영한 2020). IFRS9으로 인한 회계처리의 변동이 과세소득과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과세당국이 이러한 개정 기준서의 시행 전에 필요한 세법개정 방향과 유권해석을 적시성 있게 제시하여 개정 기준서 적용 기업들이 세무조정 데이터 관리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중간 재무제표 작성 시 적절한 법인세 회계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신유정과 이영한 2020).

4. 은행의 대손에 관한 기타 선행연구

박주철(2011)은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경영성과 차이를 검증하였다. 전국 영업이 가능한 시중은행과 달리, 지방은행은 1967년 정부의 지방은행 설치 정책에 의해 지방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만 영업점의 개설 및 영업이 가능하며 총여신의 70%가 해당 영업구역의 중소기업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제한이 있다. 2004년에서 2008년까지의 결산 재무제표에 의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성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과 자기자본순이익률에서는 지방은행과 시중은행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박주철 2011). 둘째, 수익성지표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은행 수익성 또는 비용효율성

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특성에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에 유의한 차이가 다수 있었다(박주철 2011). 원화유동성비율, 총자산대출금비율, 중소기업대출금비율, 유가증권보유비율, 총자산대비 순이자수익비율에서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유의하게 높고, 업무용고정자산비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총자산 자연로그값, 대손충당금비율은 시중은행이 지방은행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자산운용방식에서의 차이를 말해주는데, 지방은행은 대출금,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이 높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시중은행은 업무용 고정자산에의 투자가 많은 것을 보여준다(박주철 2011). 셋째, 수익성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과 자기자본순이익률에는 총자산 자연로그값과 총자산대비 순이자수익비율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대손충당금비율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규모가 클수록, 예대마진이 높을수록, 대손상각이 작을수록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박주철 2011).

김상현(2011)에 의하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취약한 은행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은행들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게 유지하려는 충분한 유인을 가지게 된다. 은행들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해 위험자산을 줄이는 방법, 증자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기본자본을 확충하거나 후순위채를 발행해 보완자본을 늘리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조달기간이나 시장상황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고려할 때 후순위채를 통해 보완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이 기타 방법에 비해 가장 단기간에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사용 될 수 있다(김상현 2011).

또한 은행의 업종 특성상 당기순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량적 항목인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은 기본자본의 감소를 통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상현 2011). 따라서 대손충당금의 적립수준이 높은 은행일수록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는 대안으로 후순위채에 대한 상대적인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김상현 2011). 이에 김상현(2011)은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이 보완자본인 후순위채의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당기 대손충당금적립액 수준변수 및 전기 대비 대손충당금적립액 변화변수와 후순위채 변수 사이에 모두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측되었다(김상현 2011). 이는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액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유인이 높은 은행일수록 보완자본인 후순위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김상현 2011).

박정수 등(2013)은 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가 은행의 수익성과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보고자 국제 은행패널 자료인 Bankscope DB를 기초로 실증분석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대출확대의 효과는 대출확대가 정상적인 수준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과도한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나아가 과도한 수준의 대출확대는 정상적인 수준의 대출확대가 총자산이익률, 순이자마진 등의 수익성 지표를 높이는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도한 대출확대는 대손충당금 및 무수익여신비율 등에 반영되는 은행의 위험성을 추가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도산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수 등 2013).

김지령 등(2013)은 부산저축은행과 4개의 관계회사 저축은행이 2011년 2월에 영업정지 처분된 점에 관심을 갖고, 비리로 부실 실태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악용된 회계부정을 적발하여 이를 예방하는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는데도 물적 담보를 확보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의 PF대출에 계속 집중하여 외형으로는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연체율은 증가하였다(김지령 등 2013).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공모하여 가공의 SPC를 설립하고 막대한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금융기관이 아닌 대주주 및 경영진의 사금고로 유용되었고, 부진한 SPC사업을 정상여신으로 위장하고자 불법대출을 반복하였다(김지령 등 2013). 또한 분식회계를 통하여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후순위채를 남발하여 BIS비율을 높게 발표하였다. 그밖에도 흑자분식을 이용한 부정은 다양하다(김지령 등 2013). 이러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발견하지 못하고 대손충당금을 적정수준으로 반영하지 못한 외부감사인의 책임도 크다(김지령 등 2013).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내세운 완화된 정부정책과 금융감독원의 소홀한 감독도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로 인한 부실을 키운 것으로 주장하였다(김지령 등 2013).

유순미와 장지경(2014)은 감사품질을 감사인 규모(Big4 여부)와 감사인 교체로 정의하고 양호한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그렇지 않은 상호저축은행보다 이익조정 정도가 더 낮은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감사품질의 대응치 중 BIG4에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와 Big4로 감사인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 재량적 대손충당금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다(유순미와 장지경 2014). 이것은 Big4

감사인이 non-Big4 감사인보다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부실감사나 감사실패에 따른 결과로 부담해야 할 감사인의 소송위험, 금전적 손실, 이미지나 평판에 따른 손상 정도 등도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나 부실감사에 따른 미래 손실위험을 회피할 유인이 더 클 수 있어 감사품질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량적 대손충당금이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에는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지만 BIG4 감사인으로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의한 감소를 보이는데, 이는 자유수입제도하에서 경쟁에 의하여 감사인이 교체된 경우라 하더라도 독립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이다(유순미와 장지경 2014).

창성수 등(2015)은 금융당국의 규제강화가 은행의 효율성에 미치는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상반된 영향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실제 관리하고 있는 건전성감독 지표를 종합적으로 구성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1년부터 최근 2011년 까지 은행경영실태평가 실제지표 전체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2단계(two-stage) 모형을 구축하고 건전성감독 지표와 효율성의 관계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자본적정성 변수 중 BIS자기자본 비율은 BIS기본자본비율이나 단순자기자본비율과 달리 은행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독당국이 건전성감독 지표의 규제를 통해 은행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BIS자기자본비율 보다는 BIS기본자본비율이나 단순자기자본비율 규제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해석된다.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율은 서로 상반되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낮추고 대손충당금적립율을 높이도록 지도하는 현재의 규제 방식이 은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충된 논리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원화에대율은 우량은행과 비우량은행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측정되는데, 이는 비우량은행은 예대비율을 높여 수익성 확대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겠지만 예대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우량은행의 경우에는 예대비율 확대가 오히려 유동성 저하로 이어져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창성수 등 2015).

윤중철과 이상욱(2017)은 은행의 대손충당 적립과 자기자본비용 관계를 추정하고 자기자본비용의 산정에 중요한 요소인 은행의 체계적 위험(베타)과 은행 대손충당 적립과의 설명관계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은행의 대손충당 적립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용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행의 대손충당 적립은 은행의 체계적 위험(베타)과도 양(+)의 관계로 나타나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은행의 체계적 위험과 동시에 자기자본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윤종철과 이상욱 2017). 한편, 은행이 지주회사 소속인 경우에는 은행 대손
 충당 적립에 따른 은행 체계적 위험 및 자기자본비용의 증가 폭이 감소되는 것으
 로 나타나 지주회사에 소속된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경영 지배구조가 선진화 및 투
 명성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소속에 따른 은행들의 경영 투명성 개선효과
 등이 은행의 체계적 위험 및 자기자본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종철과 이상욱 2017).

이건재(2019)는 국내은행의 매도가능금융상품을 이용한 영업이익 및 규제자본
 관리행태를 제시하였다. IAS 39는 매도가능금융상품의 미실현손익을 기타포괄손익
 으로 분류하여 당기손익에서 배제하도록 하였고 은행 자기자본규제 협약인 바젤Ⅱ
 는 그러한 미실현손익을 규제자본에서 필터링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은행은 미
 실현손익의 크기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상품을 선별적으로 매도함으로써 영업이익 및 규
 제자본을 관리할 유인을 가진다. IAS 39 적용기간 중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 결과, 국내은행이 매도가능금융상품의 선별적 매도를 통해 영업이익을 유연화
 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보다 많은 매도가능금
 융상품 처분이익을 인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본규제변수는 매도가능금융상품 처분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매도가능금융상품의 선별적 매도가 규제자본 관리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았
 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결과는 미실현손익 필터링 조항이 폐지된 바젤Ⅲ 적용기간
 뿐만 아니라, 바젤Ⅱ 적용기간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이건재 2019). 이는 국내
 은행들이 국제금융위기 이후 충분히 여유있는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 왔고 국내에서
 는 바젤Ⅱ 하에서도 매도가능금융상품에서 인식된 미실현손익의 상당부분이 규제
 자본에 반영된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이건재 2019).

2018년부터 적용된 IFRS 9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실현손익을 당기순이익으로 재순환할 수 없도록 하여 선별적
 매도를 통한 이익관리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이건재 2019). IAS 39 적용기간과
 IFRS 9 적용기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IFRS 9 적용 이후 FVOCI 금융자산에서
 인식한 실현손익의 크기가 IAS 39 적용기간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인식한 처분
 이익의 크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별적 매도를 통한
 이익유연화의 행태 역시 약화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 또한 약하게나마 발견되었다
 (이건재 2019).

제3장 연구방법론

제1절 가설의 설정

기업은 다양한 이익관리 동기가 있다는 것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이익관리 연구는 McNichols and Wilson(1988)의 연구 이후 주로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를 이용한 이익관리 행태가 보고되고 있다.

은행의 대손비용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손충당금 규모의 전략적 선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본관리 가설, 이익평준화 가설, 신호가설 등을 제시하였다(서병호 2014). 자본관리 가설은 1990년 Moyer가 제시한 것으로서 대손충당금이 자기자본의 일부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본적정성 지표가 양호하지 못한 은행일수록 대손충당금을 과다 적립한다는 개념이고, 이익평준화 가설(Income Smoothing Hypothesis)은 1995년 Collins 등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서 은행의 경영진이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수익률이 높을 때에는 대손충당금을 과다 적립한다는 가설이며, 신호 가설은 1994년 Wahlen이 제시한 것으로서 은행의 경영진이 주식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과다 적립한다는 가설이다(서병호 2014).

이러한 선행연구는 주시하다시피, 은행이 기대한 이익을 보고하려는 의도로 이익조정을 구사하며, 이때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 등의 설정비율을 재량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여 여타 산업에서 매출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수익증가가 기대된 은행업종에서 이익을 줄이는 이익조정을 실행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은행업종에서의 수익증가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거시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원된 금융혜택이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처리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업과 서민지원 자금은 거의 대부분 은행창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및 가계대출의 증가와 정부의 보증에 의한 이자유예조치, 대출만기 연장 등으로 부실률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이러한 혜택에 의하여 은행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시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인 영업활동의 결과가 아닌 외생적 영향으로 영업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은행업의 고수익 보고에 대한 평가는 수익창출의 근원에 대한 인식, 고통분담과 형평성 차원 등의 시각에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다. 특히 은행이 수동적인 수익에 기대어 임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해상황에서의 국민화합을 해치는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로 보도되었다. 이에 대하여 은행권은 최근 사회적 공감대가 표출되어 제기된 이른바 '이익공유제'의 이익분담의 압박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익관리 관점에서 이러한 점은 은행이 이른바 정치적 비용가설(Political Costs Hypothesis)로 인한 이익관리의 동기를 가질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치적 비용가설이란, 기업에서 수행한 활동이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노출되어 사회적인 관심 대상이 되거나 정치적 이슈가 될 경우, 규제당국에서 정책적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익을 환수하는 규제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기업이 지불해야 할 잠재적 비용이 늘어나게 될 리스크를 일컫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코로나19 사태에서 은행이 전략적으로 이익을 더 낮게 보고하려는 유인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은행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발생된 이익을 미래기간으로 이연하기 위한 이익의 하향조정(Earnings Decreasing Management)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은행이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등 대손항목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익을 하향조정 하였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 가설1. 국내은행은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에 이전 연도 대비 대손상각비를 높게 설정함으로써 이익의 하향조정을 의도하였을 것이다.
- 가설2. 국내은행은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에 이전 연도 대비 대손충당금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이익의 하향조정을 의도하였을 것이다.

제2절 연구모형의 설계

1. 가설검증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도에 국내은행에서 이익의 하향조정이 구사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분석모형을 설계하였다.

<가설 1의 검증모형>

$$LLP = \alpha_1 COVID + \alpha_2 NI + \alpha_3 (COVID \times NI) + \alpha_4 LOAN + \alpha_5 \Delta LOAN + \alpha_6 NPL + \alpha_7 \Delta NPL + \alpha_8 SIZE + \alpha_9 MK + \alpha_{10} IFRS + \epsilon \quad \text{식(1)}$$

<가설 2의 검증모형>

$$LLA = \beta_1 COVID + \beta_2 NI + \beta_3 (COVID \times NI) + \beta_4 LOAN + \beta_5 \Delta LOAN + \beta_6 NPL + \beta_7 \Delta NPL + \beta_8 SIZE + \beta_9 MK + \beta_{10} IFRS + \epsilon \quad \text{식(2)}$$

<종속변수>

LLP(loan loss provision): 대손상각비/기초총자산,

LLA(Loan loss allowance): 대손충당금/기초총자산,

<주설명변수>

COVID :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NI : 대손설정 반영 이전의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통제변수>

LOAN : 대출채권/기초총자산,

$\Delta LOAN$: 대출채권의 변동/기초총자산,

NPL : 무수익여신(=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기초총자산,

ΔNPL : 무수익여신의 변동액/기초총자산,

SIZE : 기업규모(=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IFRS : 회계기준이 변경 적용된 2011년과 2018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ϵ : 잔차항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손상각비(LLP)와 대손충당금(LLA)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대손상각비(LLP)는 그 자체로 부실채권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에 적립한 비용으로 산술구조상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작용을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기 대손충당금(LLA)은 제각된 채권에 소요된 비축액이며 여기에 미래의 대출 회수가

능성을 판단하여 대손상각비가 추가된 설정액이기 때문에 은행의 이익보고 전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측정된 대손항목은 그 값이 작을수록(클수록)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뎡게) 계상된 것이므로 이익을 상향(하향)시키는 이익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정남철과 김현아 2018).

각 검증모형에서 주 설명변수는 2020년에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를 표시하는 COVID이다. 가설의 논리에 의하여, 만일 은행 경영자가 코로나19 시기에 타 업종에 비하여 높은 이익을 보고하는데 정치적 비용가설에 의한 부담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가급적 이익을 감소하여 보고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또한 대손상각비 설정 이전 당기순이익(NI)의 크기를 종속변수에 회귀하여 이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대손설정액이 증가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COVID×NI의 상호작용 변수를 통하여 코로나19 발발 연도에 당기순이익이 대손항목을 증가시키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주 검증변수인 COVID, NI, COVID×NI 등 변수는 종속변수에 양(+)의 부호가 예상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대손항목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대출채권(LOAN)과 대출채권의 증가(Δ LOAN)는 전체 대손항목 설정액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양(+)의 부호가 예상된다(강현정 등 2017). 무수익여신(NPL)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표 1>)에 의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여신의 합으로, 경영자가 손실을 조기에 인식한다면 대손상각비는 차기의 고정이하 여신의 변화와 관련성이 있지만, 손실인식을 지연시키고자 한다면 전기의 고정이하여신과 관련성이 있다(김영준 등 2016). 따라서 NPL과 Δ NPL의 부호는 예상할 수 없다. 규모변수(SIZE)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비용을 대리하는 변수로 포함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모형에도 포함시켰다(문현주 2004). 은행규모(SIZE)가 클수록 정치적 비용도 커지기 때문에 이 비용에 민감한 금융기관의 경영자들은 영업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할 경우에는 보고이익을 하향 조정할 유인이 있다. 따라서 SIZE는 양(+)의 부호로 기대한다. IFRS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연도(2011)와 1109호를 적용해야하는 회계기준 변경연도(2018)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써, 미래채무상환능력기준(FLC)과 두 차례 회계기준 변경 등이 은행의 대손설정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이미주 등 2017)7).

7) 가설검증모형에서 더미변수를 제외한 연속변수는 기초총자산으로 표준화하였는데, 전기총대출금으로 표준화한 연구도 있다(김영준 등 2016).

제3절 표본의 선정

본 연구의 검증대상은 KB국민·신한·하나(KEB)·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특수은행인 기업은행,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스탠다드차티드)와 한국시티은행, 그리고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 등 6개 지방은행에 한정하였다. 실증분석에 필요한 재무변수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사업보고서와 (주)에프엔가이드에서 제공하는 DataGuide에서 입수하였다. 본 연구는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표본을 선정함에 있어서 외환위기에 의한 구제금융이 진정되고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거시경제적인 연도효과를 완화하고자 하였다⁸⁾.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과 적용연도도 표본선정 기준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표본은 2011년부터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까지 10년간이며, 계속기업이 유지된 은행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연도별-은행별 표본은 150개(15개 은행 × 10년)이며, 이 중 은행합병 전후 표본 4개는 편향(bias)과 실증결과 해석의 일반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거하여 최종표본 146개(150개 - 4개)가 가설검증에 활용되었다⁹⁾.

8) 2007년에 미국에서 발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crisis) 사태로 초대형 모기지론(mortgage loan)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시작되어 전 세계로 파급되어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9) NH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가 2012년에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였으므로, 2011년이 제외되었으며, 하나은행은 2015년 한국외환은행(KEB)과 합병하였으므로 2014년까지만 표본에 포함하고, 2015년 이후는 한국외환은행(KEB)에 해당된다.

제4장 실증분석 결과

제1절 기술통계량

<표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n=146)

구분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LLP	0.010	0.007	0.012	0.000	0.092
LLA	0.011	0.009	0.007	0.003	0.062
COVID	0.103	0.000	0.305	0.000	1.000
NI	0.064	0.066	0.019	0.024	0.156
LOAN	0.693	0.705	0.079	0.473	0.832
ΔLOAN	0.060	0.053	0.069	-0.098	0.530
NPL	-0.013	-0.001	0.025	-0.118	0.025
ΔNPL	0.062	0.011	0.101	0.003	0.277
SIZE	31.422	31.550	1.350	27.953	33.410
MK	0.580	1.000	0.494	0.000	1.000
IFRS	0.192	0.000	0.395	0.000	1.000

<변수의 정의>

LLP(loan loss provision): 대손상각비/기초총자산,

LLA(Loan loss allowance): 대손충당금/기초총자산,

COVID :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NI : 대손상각비 반영 이전의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LOAN : 대출채권/기초총자산,

ΔLOAN : 대출채권의 변동/기초총자산,

NPL : 무수익여신(=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기초총자산,

ΔNPL : 무수익여신의 변동액/기초총자산,

SIZE : 기업규모(=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MK : 대형 시중은행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IFRS : 회계기준이 변경 적용된 2011년과 2018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표 3>은 본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변수들의 분포에 극단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터미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를 1%와

99%에서 조정(winsorize)하였다(김영준 등 2016). 주된 검증변수인 대손상각비(LLP)의 평균(중위수)은 0.010(0.007)으로 김영준 등(2016)의 연구에서 산출된 대손상각비의 평균(중위수)은 0.0026(0.002)보다 높은 값을 보였으며,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0.000, 0.092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대손충당금(LLA)의 평균(중위수)은 0.011(0.009), 최소값과 최대값의 평균은 각각 0.003, 0.062로 나타났다. 요컨대, 이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 시기에 종속변수인 대손항목 설정액이 선행연구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주 검증변수인 COVID의 평균은 0.103으로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의 표본수효가 약 15개라는 것을 말해준다. 기초 자산총계 대비 대손상각비 차감전 순이익(NI)의 평균 0.064로 강현정 등(2017)의 0.028, 정남철(2018)의 0.021보다 높게 나타나 연구 대상기간 동안 은행의 실적이 양호하여 이익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LOAN의 평균은 0.693으로 강현정 등(2017)의 평균 0.798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대출채권의 증가(Δ LOAN)의 평균은 0.060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기초 자산총계 대비 무수익여신 비율(NPL)의 평균은 -0.013으로 강현정 등(2017)과 정남철(2018)의 평균 약 10%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여 연구대상 기간에 은행이 부실대출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Δ NPL의 평균을 통하여 무수익여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SIZE는 평균이 약 31.422로 나타났으며, MK와 IFRS의 평균은 각각 0.580, 0.192로 146개 표본 중 85개 시중은행과 회계기준이 변경된 28개 연도 표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절 단변량분석

1. 상관분석

<표 4> 상관분석 결과

	COVID	LLP	LLA	NI	LOAN	ΔLOAN	NPL	ΔNPL	SIZE	MK
LLP	.128	1.000								
	.040									
LLA	.188	.842	1.000							
	.002	.000								
NI	.178	.455	.440	1.000						
	.004	.000	.000							
LOAN	.206	.295	.240	-.190	1.000					
	.001	.000	.000	.000						
ΔLOAN	.082	.039	-.036	.305	.149	1.000				
	.188	.532	.569	.017	.017					
NPL	-.055	-.025	-.042	-.124	.042	-.015	1.000			
	.376	.693	.501	.050	.503	.813				
ΔNPL	.087	.111	.103	.095	.091	.001	-.789	1.000		
	.166	.075	.101	.142	.145	.988	.000			
SIZE	.120	.179	.107	.294	.337	-.058	-.086	.182	1.000	
	.055	.004	.088	.000	.000	.356	.168	.003		
MK	.010	.201	.124	.176	.044	-.078	-.191	.206	.798	1.000
	.635	.001	.050	.003	.514	.312	.001	.001	.000	
IFRS	-.089	-.146	-.160	.148	.148	.069	-.045	.075	.104	.005
	.156	.019	.010	.017	.017	.274	.476	.233	.097	.919

<변수의 정의>

LLP(loan loss provision): 대손상각비/기초총자산,

LLA(Loan loss allowance): 대손충당금/기초총자산,

COVID :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NI : 대손상각비 반영 이전의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LOAN : 대출채권/기초총자산,

ΔLOAN : 대출채권의 변동/기초총자산,

NPL : 무수익여신(=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기초총자산,
 Δ NPL : 무수익여신의 변동액/기초총자산,
 SIZE : 기업규모(=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MK : 대형 시중은행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IFRS : 회계기준이 변경 적용된 2011년과 2018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주1)각 셀의 위는 상관계수, 아래는 유의수준을 나타냄(양측 검증).

<표 4>는 가설검증에 활용된 주요변수 간의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이다. 변수별 각 셀의 위쪽은 상관계수이며 아래쪽은 통계적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우선, COVID와 LLP, LLA의 상관계수는 각각 0.128, 0.188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은행에서 코로나가 발발한 2020 연도에 대손상각비과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계상함으로써 이로 인한 비용화를 통하여 이익의 하향조정을 의도한 것을 시사한다.

LLP, LLA 등 대손항목 변수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대손충당금에서 대출채권에 대한 제각액이 많거나 대출채권에 대한 미래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할 경우 대손충당금에 충당할 대손상각비를 비례적으로 증가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NI와 LLP, LLA 등 대손항목 변수 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관측되어 대손설정 이전 이익이 많을수록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COVID와 NI의 상관계수는 0.178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임으로써 코로나19 발발 연도인 2020년에 은행의 대손상각 설정 이전의 이익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COVID와 LOAN의 상관계수는 0.206으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성으로 나타나 코로나19 발발 연도인 2020년에 국가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가계 신용대출 등에 금융지원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¹⁰⁾. 또한 LOAN과 LLP, LLA 등 대손항목 변수 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관측되어 은행이 대출 만기연장 등으로 부실이 이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 보수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풀이된다.

LLP, LLA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통제변수는 LOAN, SIZE 등으로 대출채권이 많고 은행규모가 클수록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많아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대손설정 전 순이익(NI)은 은행규모(SIZE)와 통계적으로 유의

10) 이와 관련된 신문 헤드라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속 가계·자영업자 대출 폭증…2분기 가계신용 1637조” 출처: 매일경제 2020.08.19. 기사. <https://www.mk.co.kr/news/economy/>

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자산의 대부분이 대출채권인 은행의 경우 대출채권의 증가가 잠재적 성장가능성과 수익성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평균차이분석

<표 5> 평균차이분석 결과

구분	COVID (n=15)		non-COVID (n=131)		검정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t통계량	p값
LLP	0.010	0.012	0.004	0.002	0.007	6.982 ***	0.000
LLA	0.011	0.007	0.005	0.002	0.006	8.614 ***	0.000
NI	0.078	0.023	0.064	0.018	0.014	2.882 ***	0.004
LOAN	0.758	0.072	0.689	0.078	0.069	3.585 ***	0.002
ΔLOAN	0.061	0.071	0.037	0.019	0.024	3.602 ***	0.001
NPL	-0.019	0.027	-0.013	0.025	-0.006	-0.886	0.376
ΔNPL	0.097	0.132	0.059	0.099	0.037	1.388	0.166
SIZE	32.071	1.306	31.381	1.345	0.689	1.980 **	0.046

<변수의 정의>

LLP(loan loss provision): 대손상각비/기초총자산,

LLA(Loan loss allowance): 대손충당금/기초총자산,

COVID :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NI : 대손상각비 반영 이전의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LOAN : 대출채권/기초총자산,

ΔLOAN : 대출채권의 변동/기초총자산,

NPL : 무수익여신(=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기초총자산,

ΔNPL : 무수익여신의 변동액/기초총자산,

SIZE : 기업규모(=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주 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나타냄.

<표 5>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대상 은행표본 146개를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COVID)과 코로나19 발발과 무관한 나머지 연도(non-COVID)로 구분하여 대손항목 설정변수 및 주요변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¹¹⁾.

주된 검증변수인 대손상각비(LLP)의 평균은 두 집단에서 각각 0.010과 0.004로

COVID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수준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6.982$)를 보였다. 대손충당금(LLA)의 평균은 두 집단에서 각각 0.011과 0.006으로 이 변수 또한 COVID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t 통계량은 8.614로 1% 수준에서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발발한 2020년에 은행이 기업대출 및 가계신용 대출 등에 대한 부실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대손설정을 더 높게 추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비용가설의 관점에서 범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에 즈음하여 이익을 창출한 업종에 쏠린 관심을 회피하기 위한 이익조정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대손설정 이전 당기순이익 변수인 NI의 평균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집단에서 NI의 평균은 각각 0.078과 0.064로 COVID 집단에서 더 높았으며 t 통계량은 2.882로 1% 수준에서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였다.

이는 국내은행이 코로나19 발발 이전 연도에 비하여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에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LOAN과 Δ LOAN의 평균은 COVID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t 통계량은 두 변수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정부의 지원에 의한 기업 및 가계 신용대출이 이전보다 증가한 것을 반영한다. 무수익여신에 대한 평균차이는 유의하게 관측되지 않았으며, SIZE는 COVID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에 은행규모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1) 시중대형 은행변수인 MK와 회계기준 변경연도 변수 IFRS는 더미변수로 모수통계 기법인 평균차이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제3절 다중회귀분석

이하 다중회귀분석은 본 연구의 주된 가설검증 모형으로 대손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채권과 그 변동(LOAN, ΔLOAN), 무수익여신과 그 변동(NPL, ΔNPL), 기업규모(SIZE), 회계기준의 변동(IFRS) 등 통제변수들을 반영한 상태에서 코로나19 발발 연도인 2020년에 은행의 이익보고 의도를 검증한 결과이다. 다중회귀분석 전반에 걸쳐 모형적합성을 나타내는 수정 R²에 대한 F값이 1% 수준에서 유의하여 검증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며, 분산팽창계수(VIF)로 측정된 다중공선성 문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었다¹²⁾.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로 인하여 나타날 다중공선성문제의 심각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각 변수의 분산팽창계수(VIF)를 조사한 결과 최소 1.037에서 최대 3.90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문제는 우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¹³⁾.

1. 가설1의 검증결과

$$\begin{aligned}
 LLP = & \alpha_1 COVID + \alpha_2 NI + \alpha_3 (COVID \times NI) + \alpha_4 LOAN + \alpha_5 \Delta LOAN \\
 & + \alpha_6 NPL + \alpha_7 \Delta NPL + \alpha_8 SIZE + \alpha_9 MK + \alpha_{10} IFRS + \epsilon
 \end{aligned}$$

-
- 12).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충돌할 때(즉 독립변수들끼리 서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할 때)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진단한바, 최대 VIF는 2.238로 연구결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이상 이면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 13). 독립변수 상호간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할 때, 두 개 이상의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충돌될 문제가 있는데, 이를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로 다중공선성을 파악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VIF 값이 10 이상으로 관측되면 독립변수들 상호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한다.

<표 6-1> COVID가 대손상각비 설정에 미치는 영향 (n=146)

구 분	종속변수 : LLP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통계량	p-value
상수	0.144	0.028		5.145 ***	0.000
COVID	0.011	0.003	0.267	3.665 ***	0.000
LOAN	0.033	0.010	0.213	3.134 ***	0.002
ΔLOAN	0.012	0.010	0.070	1.202	0.230
NPL	0.154	0.046	0.321	3.379 ***	0.001
ΔNPL	0.048	0.011	0.402	4.233 ***	0.000
SIZE	0.003	0.001	0.379	3.403 ***	0.001
MK	0.008	0.003	0.314	2.977 ***	0.003
IFRS	-0.003	0.002	-0.090	-1.539	0.125
수정 R ² (F값)	0.181 (7.291)***				

<표 6-2> COVID와 이익의 상호작용이 대손상각비 설정에 미치는 영향 (n=146)

구 분	종속변수 : LLP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통계량	p-value
상수	0.122	0.025		4.786 ***	0.000
COVID	0.021	0.010	0.404	2.096 **	0.037
NI	0.317	0.041	0.497	7.779 ***	0.000
COVID×NI	0.265	0.123	0.418	2.162 **	0.032
LOAN	0.023	0.010	0.152	2.452 **	0.015
ΔLOAN	0.013	0.010	0.074	1.327	0.186
NPL	0.200	0.041	0.416	4.823 ***	0.000
ΔNPL	0.055	0.010	0.454	5.291 ***	0.000
SIZE	0.002	0.001	0.270	2.662 ***	0.008
MK	0.008	0.002	0.306	3.220 ***	0.001
IFRS	0.000	0.002	0.006	0.105	0.917
수정 R ² (F값)	0.339 (12.919)***				

<변수의 정의>

LLP(loan loss provision): 대손상각비/기초총자산,
 COVID :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NI : 대손상각비 반영 이전의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LOAN : 대출채권/기초총자산,
 Δ LOAN : 대출채권의 변동/기초총자산,
 NPL : 무수익여신(=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기초총자산,
 Δ NPL : 무수익여신의 변동액/기초총자산,
 SIZE : 기업규모(=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MK : 대형 시중은행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IFRS : 회계기준이 변경 적용된 2011년과 2018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주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나타냄.

<표 6-1>에서 주 관심변수 COVID가 종속변수 LLP에 반영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는 0.011 (0.267)이고 이에 대한 t통계량은 3.665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에 대손상각비를 다른 연도에 비하여 더 많이 설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표 6-2>에서 대손설정 이전 당기순이익(NI)을 추가하였을 때, COVID의 비표준화 회귀계수는 0.021로 감소하였으나 NI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는 0.317 (0.497)로 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양(+)의 반응을 보였다. 이는 COVID의 설명력이 NI로 대체되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가설1을 검증하는 주 관심변수 COVID×NI가 종속변수 LLP에 반영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는 0.265 (0.418)이고 이에 대한 t통계량은 2.162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발발로 대손설정 이전 순이익의 증가가 추산되었을 경우에 코로나19 발발 이전 연도에 비하여 대손상각비를 더 많이 설정한 것을 의미하며, 가설1이 지지되었다. 대손상각비(LLP)는 부실채권에 대비하여 적립한 비용으로 산술구조상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높게 (낮게) 설정하게 되면 최종 보고이익은 낮게 (높게) 표시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20년 코로나19 발발 시점에 대손상각비를 비례적으로 많이 설정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는 은행이 이익을 낮게 보고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통제변수에서는 예상된 부호로 종속변수인 대손상각비(LLP) 설정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LOAN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설명력을 보임으

로써 대출채권의 증가가 커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대손상각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강현정 등 2017). 그러나 $\Delta LOAN$ 은 양(+)의 설명력을 보일 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대출금과 그 변동액은 은행의 이익을 형성하는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NPL과 ΔNPL 은 둘 다 LLP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가 추정되었다. 무수익여신(NPL)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표 1>)에 의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여신의 합으로, 미래 시점의 대손발생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대손설정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 비재량적 대손충당금이 많을 경우 상대적으로 재량적 대손충당금이 낮아질 수도 있다(유순미와 장지경 2014). 또한 경영자가 손실을 조기에 인식한다면 대손상각비는 차기의 고정이하 여신의 변화와 관련성이 있지만, 손실인식을 지연시키고자 한다면 전기의 고정이하여신과 관련성이 있다(김영준 등 2016).

본 연구의 결과는 고정이하 부실채권을 대표하는 무수익여신과 그 증가로 인하여 대손상각비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김영준 등 2016). 또한 SIZE, MK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양(+)의 결과로 나타나 은행규모가 클 경우와 시중은행에서 정치적 비용가설에 입각하여 대손상각비가 더 많이 계상되는 결과를 보였다(문현주 2004; 권혁대와 이은서 2016).

2. 가설2의 검증결과

$$LLA = \beta_1 COVID + \beta_2 NI + \beta_3 (COVID \times NI) + \beta_4 LOAN + \beta_5 \Delta LOAN + \beta_6 NPL + \beta_7 \Delta NPL + \beta_8 SIZE + \beta_9 MK + \beta_{10} IFRS + \epsilon$$

<표 7-1> 패널 A. COVID가 대손충당금 설정에 미치는 영향 (n=146)

구 분	종속변수 : LLA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통계량	p-value
상수	0.098	0.017		5.718 ***	0.000
COVID	0.005	0.002	0.149	2.511 **	0.013
LOAN	0.009	0.006	0.093	1.365	0.173
ΔLOAN	0.002	0.006	0.020	0.350	0.726
NPL	0.072	0.028	0.245	2.577 **	0.011
ΔNPL	0.023	0.007	0.313	3.289 ***	0.001
SIZE	0.003	0.001	0.459	4.119 ***	0.000
MK	0.007	0.002	0.475	4.501 ***	0.000
IFRS	-0.003	0.001	-0.113	-1.916 *	0.057
수정 R ² (F값)	0.180 (7.248)***				

<표 7-2> COVID와 이익의 상호작용이 대손충당금 설정에 미치는 영향 (n=146)

구 분	종속변수 : LLA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통계량	p-value
상수	0.083	0.015		5.438 ***	0.000
COVID	0.016	0.006	0.505	2.646 ***	0.009
NI	0.201	0.025	0.519	8.208 ***	0.000
COVID×NI	0.170	0.074	0.441	2.302 **	0.022
LOAN	0.003	0.006	0.029	0.475	0.635
ΔLOAN	0.018	0.006	0.171	3.103 ***	0.002
NPL	0.101	0.025	0.344	4.031 ***	0.000
ΔNPL	0.027	0.006	0.366	4.319 ***	0.000
SIZE	0.002	0.001	0.345	3.439 ***	0.001
MK	0.007	0.001	0.467	4.962 ***	0.000
IFRS	0.000	0.001	-0.012	-0.230	0.818
수정 R ² (F값)	0.339 (12.919)***				

<변수의 정의>

LLA(Loan loss allowance): 대손충당금/기초총자산,
 COVID :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NI : 대손상각비 반영 이전의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LOAN : 대출채권/기초총자산,
 Δ LOAN : 대출채권의 변동/기초총자산,
 NPL : 무수익여신(=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기초총자산,
 Δ NPL : 무수익여신의 변동액/기초총자산,
 SIZE : 기업규모(=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MK : 대형 시중은행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IFRS : 회계기준이 변경 적용된 2011년과 2018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주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나타냄.

<표 7-1>에서 주 관심변수 COVID가 종속변수 LLA에 반영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는 0.005 (0.149), t통계량은 2.511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설명력을 보였다. <표 7-2>에서 대손충당금 설정 이전 당기순이익(NI) 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COVID의 비표준화 회귀계수는 0.016으로 증가하고 NI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는 0.201 (0.519)로 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양(+)의 반응을 보였다. 나아가 가설2를 검증하는 주 관심변수 COVID×NI가 종속변수 LLA에 반영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는 0.170 (0.441)이고 이에 대한 t통계량은 2.302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발발로 대손설정 이전 순이익이 상호작용되었을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가설2 또한 지지되었다. 당기 대손충당금(LLA)은 제각된 채권에 소요된 비축액이며 여기에 미래의 대출 회수가능성을 판단하여 대손상각비가 추가된 설정액이기 때문에 은행의 이익보고 전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에 대출채권에 대한 제각액(상각액)을 충당한 이후 대손충당금을 비축할 의도와 동시에 미래의 채권 회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을 연구대상 다른 연도에 비하여 더 많이 설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익관리 차원에서 다른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영업수익을 창출한 은행이 이익보고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익을 줄이는 전략을 구사한 결과일 수도 있다.

3.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시의적으로 의미있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 은행은 코로나19 발발로 얻은 반사이익을 덜 노출시키려는 의도로 이익조정을 구사할 개연성이 크다. 은행이 코로나19 사태에 즈음하여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업수익을 창출하고 이에 연동된 이익의 크기가 증가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은행은 정부차원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지원하는 기업 및 가계 신용대출의 금융창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출의 증가에 따른 이자수익과 정부보증에 의한 이자유예조치, 대출만기 연장 등으로 부실률이 줄어든 혜택에 힘입어 높은 영업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시기적으로 이례적인 현상이며, 은행은 고통분담과 형평성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익조정 유인을 가질 수 있다. 그 대안 방법이 대손설정의 재량성을 활용하는 것이며,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발 연도에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점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은행은 업종 특성상 코로나19 발발에 따른 후속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하여 다른 연도에 비하여 더 많은 대손설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국내은행의 경우 정부의 지원에 의해 은행의 부실채권 지표가 크게 개선되어 보이는 현상도 보도되었다. 전문가들은 은행에 대한 자산건정성과 고정이하여신은 아직 양호하다고 전망하지만, 코로나19의 방역확대와 백신개발로 인하여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부실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에 은행은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이자비용 조차 이익을 달성하지 못한 한계기업이나 취약한 가계신용 대출 등 잠재적 대출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비축한 결과를 유추할 수도 있다.

제5장 연구의 결론 및 한계

본 연구는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2020년에 대대적으로 창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발 연도에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가 다른 연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설정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KB국민·신한·하나(KEB)·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특수은행인 기업은행, 외국계 은행인 스탠다드차티드(SC제일은행)와 한국시티은행(CITY), 그리고 6개의 지방은행을 검증대상으로 146개 연도-은행별 표본을 구성하였다. 연구수행에 필요한 재무변수 자료는 에프엔가이드(FnGuide)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통하여 입수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발로 정부 지원 자금이 대량 방출된 2020년에 은행에서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가 연구대상 기간 다른 연도에 비하여 더 많이 설정되었는지를 검증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더 미변수를 취하고, 이를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에 대응한 인과적 설명관계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기술통계량, 상관분석, 평균차이분석, 다중회귀분석(선형회귀분석) 등으로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변량 상관분석 결과, 코로나19 발발 연도변수(COVID)와 대손관련 변수(LLP, LLA)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 상관성으로 나타나 은행에서 코로나가 발발한 2020 연도에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계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단변량 평균차이분석 결과, 대손상각비(LLP)와 대손충당금(LLA)의 평균은 코로나19 발발 연도변수(COVID)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였다.

셋째, 통제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에 대손상각비를 다른 연도에 비하여 더 많이 설정한 결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대손설정 이전 순이익의 증가가 추산되었을 경우에 다른 연도에 비하여 대손상각비를 더 많이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1이 지지되었다. 또한 종속변수를 대손상각비(LLP)에서 대손충당금(LLA)으로 교체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어 가설2도 지지되었다.

코로나19 사태에 즈음하여, 은행이 능동적인 노력없이 영업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기업 및 가계의 금융대출의 혜택에서 비롯된 이례적인 현상이며,

은행은 고통분담과 형평성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익조정 유인을 가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대손설정의 재량성을 활용하는 것이며,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발 연도에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점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교의 객관성과 표본의 동질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은행에 국한하여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보험업 등 다른 금융업을 함께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은행의 이익관리 변수를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에만 국한한 한계점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금융업종에 대한 이익조정을 검증하여 그 차별적 특성을 도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며, 은행이 주가, 세금전략 등 전략적 이익조정을 모색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는지를 탐색하는 연구도 수행될 수 있기를 제언한다.

< 참고문헌 >

<국외연구>

- Beatty, A., S. L. Chamberlain, and Magliolo, J. 1995. Managing financial reports of commercial banks: The influence of taxes, regulatory capital, and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3: (Autumn) 231-261.
- Collins, J., D. Shackelford, and J. Wahlen. 1995. Bank Differences in the Coordination of Regulatory Capital, Earnings and Tax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3(2): 263-292.
- Docking, D. S., M. Hirschey, and E. Jones. 1997. Information and Contagion Effects of Bank Loan-Loss Reserve Announcement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43(2): 219-239
- El-Sood, H. A. 2012. Loan loss provisioning and income smoothing in US banks pre and post the financial crisis. *International Review of Financial Analysis* 25: 64-72.
- Ma, C. 1988. Loan Loss Reserves and Income Smoothing. The Experience in the U.S. Banking Industry.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 15 (4): 487-497.
- McNichols, M., and P. Wilson. 1988. Evidence of Earnings Management from the Provision for Bad Deb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6(3): 1-31.
- Moyer, S. 1990. Capital Adequacy Ratio Regulations and Accounting Choices in Commercial Bank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3: 1231-1254.
- Wahlen, J. 1994. The Nature of Information in Commercial Bank Loan Loss Disclosures. *The Accounting Review* 69 (3): 455 - 478.
- Watts, R. L. and J. L. Zimmerman. 1986. *Positive Accounting Theor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국내연구>

- 고대영 · 김문태. 2007. 정치적 비용가설에 대한 실증분석 -정유사의 이익관리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16권 4호: 269-290.
- 고승의. 2012. 은행의 대손충당금 측정 사례연구. 회계저널 21권 2호 213-238.
- 공경태. 2019. K-IFRS 제1109호의 최초 도입으로 인한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의 계정재분류에 미치는 영향 : 금융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32권3호: 949-965.
- 권수영 · 김문철 · 손성규 · 최관 · 한봉희. 2010.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의 유용성」. 신영사. 서울.
- 권혁대 · 이은서. 2013. 은행의 대손충당금 결정요인. 재무와회계정보저널 13권 2호: 105-128.
- 김민석 · 김한수 · 최관. 2012. 최고경영자 교체시점의 Big Bath 사례연구 -대손상각 회계처리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21권 6호: 401-429.
- 김민혁. 2018. 대손충당금전입 조정에 대한 주식시장 반응 연구: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한 비교분석. 재무관리연구 35권 3호: 189-216.
- 김수성 · 고운성. 2011. K-IFRS 도입에 따른 은행업의 대손충당금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20권 1호: 109-134.
- 김우열 · 이기세 · 전성일. 2019. K-IFRS 제1109호 대손충당금 적립금 기준 변경과 기업가치. 한국회계학회학술발표논문집: 1-18.
- 김준석. 2020. 코로나19 국면의 개인투자자. 자본시장포커스 OPINION 2021-04호: 1-7.
- 김지령 · 이준호 · 권선국. 2013. 부산저축은행의 회계부정 사례. KBR(구 경영교육연구) 17권 2호: 193-227.
- 김지홍 · 박우진 · 유혜영. 2011.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금융업 사례연구: 은행업과 손해보 험업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20권 2호: 153-172.
- 김필규. 2020. 코로나19 사태가 자금조달시장에 미친 영향. 자본시장포커스 OPINION 2020-08호: 1-8.
- 김효진 · 이기훈. 2016. 금융기관의 대손준비금조정후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상대적 가치관련성. 경영학연구 45권 3호: 1041-1065.

- 김효진·제혜금·이기훈. 2014.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중국상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조정. 재무와회계정보저널 14권 3호: 1-19.
- 노산하. 2020.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약가구의 부채 리스크 점검 및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OPINION 2020-11호: 1-8.
- 문현주. 2005.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재량성과 은행가치 관련성 연구. 회계저널 14권1호: 1-26.
- 문현주. 2004. 개발발생액접근법을 통한 은행의 이익관리연구. 회계학연구 29권 2호: 111-131.
- 박연희. 2005. 대손상각비를 이용한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조정 및 BIS자기자본 관리. 세무와 회계저널 제6권 제2호: 67-85.
- 박정수·서정호·박보경. 2013. 은행의 대출확대가 은행수익성과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Bankscope 자료를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19권 1호: 51-73.
- 박주철. 2011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경영성과 차이. 세무회계연구 28권 0호: 1-17.
- 박창균. 2020.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방향. 자본시장포커스 OPINION 2020-07호: 1-5.
- 배수현·김종두. 2012.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한 은행의 이익유연화 요인에 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34권 0호: 83-98.
- 서병호. 2014.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분석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KIF 연구보고서 2014 권3호: 1-83.
- 신경희. 2020. 코로나19 관련 해외의 중소기업(SMEs) 지원정책 동향. 자본시장포커스 2020-12호 ZOOM-IN: 1-9.
- 신일항. 2017. 성과평가 관점의 은행 대손비용 산출에 대한 사례연구. 회계저널 26권 2호: 231-254.
- 유순미·장지경. 2014. 상호저축은행의 감사품질이 재량적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58집: 397-417.
- 윤순석·고대영. 2006. 노사분규와 이익조정. 회계학연구 31권 3호: 95-120.
- 윤재원·최현돌. 2005. 재무제표 본문에 인식된 정보와 주석 등에 공시된 정보의 주가관련성 차이 : 중간목표비율에 의한 은행의 대손충당금 설정사례를 대상으로. 회계저널 14권 1호: 69-98.
- 이건재. 2019. IFRS 도입 이후 국내은행의 신용손실 인식이 신용공급에 미친 영향. 경영학연구 48권 4호: 1045-1068.

- 이건재. 2019. 국내은행의 매도가능금융상품을 이용한 영업이익 및 규제자본 관리 형태 연구. 회계학연구 44권 6호: 89-123.
- 이미주·강선민·황인태. 2016. 회계기준 및 환경변화가 은행 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3326-3355.
- 정남철. 2018. 무수익여신과 재량적 대손충당금 간의 관련성, 상호저축은행의 소유 구조를 중심으로. 경역교육연구 33권 6호: 133-152.
- 정남철·김현아. 2018. 상호저축은행의 보상수준과 재량적 대손충당금. 회계와 정책 연구 23권 3호: 1-38.
- 정호섭·김경무. 2018. IFRS 9 도입에 따른 은행의 손실충당금 영향은 - 일반은행 예비영향평가를 토대로. Special Comment: 1-6.
- 지현미·박홍조. 2006. 국내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자기자본비율 조정. 회계저널 15권 제1호: 23-44.
- 창성수·송영출·한재현. 2015. 건전성감독 지표가 은행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회계와 정책연구 20권 5호: 101-128.
- 최서연·박애영. 2009. 국내 은행의 경영자 스톡옵션 보상과 재량적 대손충당금 설정을 이용한 이익조정. 세무와 회계저널 10권 2호: 75-112.
- 최순영. 2020. 2020년 1/4분기 글로벌 투자은행 성과: 코로나-19의 영향. 자본시장 포커스 2020-12호 OPINION: 1-6.
- 한아름. 2020. 코로나-19 이후 국내 증권업 수익구조 변화 분석: 위탁매매의 약진과 PI 부문의 부진. 자본시장포커스 ZOOM-IN. 2020-14호. 1-5.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